

# 한눈에 보는 정답

## 01 정치와 법

본문 12~1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②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7 ②	08 ③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③	3 ②	4 ⑤
	5 ②	6 ①	7 ④	8 ④

##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본문 21~2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⑤	3 ①	4 ③
	5 ④	6 ②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본문 30~3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④	08 ③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⑤	3 ①	4 ④
	5 ③	6 ②	7 ⑤	8 ②

I 단원 기출 플러스

01 ③	02 ⑤	03 ①	04 ③
------	------	------	------

## 04 정부 형태

본문 41~44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①	03 ②	04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④	3 ⑤	4 ⑤
	5 ②	6 ①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본문 50~5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③	2 ④	3 ⑤	4 ③
	5 ⑤	6 ③	7 ②	8 ⑤

## 06 지방 자치

본문 59~63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①	02 ②	03 ③	04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③	3 ②	4 ⑤

II 단원 기출 플러스

01 ⑤	02 ②	03 ④	04 ④
------	------	------	------

## 07 선거와 선거 제도

본문 68~73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②	06 ⑤	07 ⑤	08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②	3 ⑤	4 ⑤
	5 ②	6 ④	7 ③	8 ⑤

##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본문 79~8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②	03 ②	04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②	3 ③	4 ①
	5 ③	6 ①	7 ②	8 ④

III 단원 기출 플러스

01 ③	02 ⑤	03 ②
------	------	------

**09 민법의 기초** 본문 89~93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⑤	02 ④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②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①	2 ⑤	3 ③	4 ②
	5 ③	6 ②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본문 134~139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②	3 ④	4 ③
	5 ③	6 ②	7 ④	8 ②

**10 재산 관계와 법** 본문 99~104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②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④	3 ①	4 ②
	5 ②	6 ③	7 ③	8 ④

**14 근로자의 권리** 본문 143~149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③	03 ②	04 ①
	05 ②	06 ②	07 ③	08 ④
수능 실전 문제	1 ②	2 ③	3 ④	4 ③
	5 ⑤	6 ④		
<b>V 단원</b> 기출 플러스				
01 ④	02 ①	03 ①	04 ⑤	

**11 가족 관계와 법** 본문 110~11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③	06 ②	07 ③	08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⑤	2 ①	3 ④	4 ⑤
	5 ①	6 ④	7 ②	8 ③
<b>IV 단원</b> 기출 플러스				
01 ①	02 ⑤	03 ③	04 ③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본문 154~157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①	03 ④	04 ⑤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①	3 ③	4 ②
	5 ②	6 ⑤		

**12 형법의 이해** 본문 123~128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8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③	3 ⑤	4 ⑤
	5 ④	6 ③	7 ③	8 ②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본문 161~165쪽

수능 기본 문제	01 ③	02 ③	03 ④	04 ①
수능 실전 문제	1 ④	2 ②	3 ②	4 ⑤
<b>VI 단원</b> 기출 플러스				
01 ②	02 ④	03 ①	04 ②	

# 01 정치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2~13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①
05 ①	06 ④	07 ②	08 ③

## 0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를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으로 한정하는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정치로 보는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②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오답 피하기** ①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③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④ 정치를 좁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무 회의의 심의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⑤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 02 근대 및 현대 민주주의 이해

**문제 분석** 시민 혁명 이후 국민 주권과 권력 분립 등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바탕으로 근대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 민주제를 실시함으로써 현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정답 찾기** ② 대의 민주제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의회 제도는 대의 민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은 대의 민주제의 한계 사례가 될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민 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을 모두 실시하고 있지 않다.

## 03 정의의 이해

**문제 분석** 법의 이념 중 A는 정의이며, (가)는 평균적 정의, (나)

는 배분적 정의이다.

**정답 찾기** ㄱ. 정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되며,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이다.

ㄷ. 회사 이익에 기여도가 높은 사원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개인의 업적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것이므로 배분적 정의가 적용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ㄴ.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배분적 정의가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ㄹ.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을 추구하며,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 0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정의의 실현 등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ㄷ.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치자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ㄹ.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 05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 분석** 홉스는 자연 상태를 자기 보존 욕구, 경쟁심, 명예에 대한 갈망 등과 같은 인간의 본성으로 인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따라서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에 대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통치자에 의한 전제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①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②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 등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고자 스스로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며, 시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③ 로크는 국가 권력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2권 분립을 주장하였다.

④ 홉스는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았으므로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⑤ 루소는 일반 의지에 의한 통치를 통해서 치자와 피치자가 일치된다고 보았다.

### 06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좁은 국가 수준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현상만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좁은 의미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른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정치를 넓은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정답 찾기** ④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민 단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현상과 사회 현상이 다르다고 보므로 국가 통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회 상임 위원회의 활동을 정치로 본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의 의미를 넓게 이해한다.

⑤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 07 민주 정치 이해

**문제 분석** A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B는 현대 민주 정치, C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정답 찾기** ②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권이 확립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가 실시되었다.

③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한 것은 현대 민주 정치이다.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의제가 성립되었지만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두지는 않았다.

④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천부 인권 사상을 국가 통치의 기본 바탕으로 하였다.

⑤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였다.

### 08 정치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느 일방이 현저하게 불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일정한 규범 정립을 통해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답 찾기** ③ 민법에서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어느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정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치안을 유지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②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④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⑤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파악할 수 없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4~17쪽

1 ④  
5 ②

2 ③  
6 ①

3 ②  
7 ④

4 ⑤  
8 ④

###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를 위한 활동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보는 A는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치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B는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④ (가)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나)에 ‘☆☆ 회사, 육아 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실시’가 들어간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답안만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은 ‘2점’이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가 기관이 사회 질서 유지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본다.

②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고유의 활동만 정치로 보므로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사회적 희소 가치에 대한 자원 배분의 주체가 한정된다고 본다.

③ 국가 형성 이전에 정치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⑤ ㉠이 ‘4점’이고 (가)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나)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들어갈 수 있다.

### 2 사회 계약설 이해

**문제 분석** 국민 주권론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로크와 루소이다. 해당 질문에 C의 답변만 ㉠ 하나이므로, ㉠은 ‘예’, ㉡은 ‘아니요’이며, 따라서 C는 홉스이다. 일반 의지에 따른 국가 운영을 주장한 사회 계약론자는 루소이므로, A는 루소이다. 따라서 B는 로크이다.

**정답 찾기** ③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사회 계약론자는 홉스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② 루소는 주권이 대표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④ 홉스는 개인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상호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⑤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은 모두 국가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보았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3 법의 이념 이해

**문제 분석** A는 법적 안정성, B는 정의이다.

**정답 찾기** ② 정의의 본질적 내용은 평등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적 안정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③ 정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주로 사용된다.

④ 법적 안정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이 함부로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하고,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하며,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되어야 한다.

⑤ 법적 안정성은 법을 통해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

### 4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예'라고 응답한다. '합법적인 독재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질문에 형식적 법치주의는 '예', 실질적 법치주의는 '아니요'라고 응답한다. 따라서 A는 실질적 법치주의, B는 형식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국가 권력 행사도 정당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아니요'라고 응답한다. 따라서 두 질문에 실질적 법치주의의 응답은 불일치하며, 형식적 법치주의의 응답도 불일치한다.

**오답 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한다.

② 법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③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법의 지배'를 강조한다.

④ 실질적 법치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할 것을 요구한다.

### 5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이해

**문제 분석** '보통 선거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현대 민주 정치에

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C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사회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해 정치 참여에 제한을 두었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와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며, '직접 민주 정치의 원리에 기초한다.'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B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이다. 따라서 A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시민 혁명을 계기로 형성되었다.'는 근대 민주 정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고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가)에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현대 민주 정치에 대한 채점 결과가 2점이므로 (나)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ㄱ.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는 모두 국민 주권주의를 기초로 한다.

ㄴ. 해당 내용은 현대 민주 정치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 (나)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는 추천제 및 운번제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직 참여 기회를 부여하였다.

ㄹ. 해당 내용은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가)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나)에는 들어갈 수 없다.

### 6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답 찾기** ㄱ, ㄴ. 제시문의 '법치주의가 추구하는 권력의 통제와 자유 보장은 국민이 능동적으로 권력의 형성과 행사에 참여하는 민주적 제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통해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목적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제시문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우선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ㄹ. 제시문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의사에 따른 강력한 권력 행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 7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ㄴ.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는 위헌 법률 심사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ㄷ.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행사가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ㄱ. 형식적 법치주의는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ㄷ.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의 통치 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8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고, 을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병의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에 '1명'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가 국가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므로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② 갑은 정치가 국가의 운영과 관련한 공동의 의사를 결정하는 국가만의 고유한 활동이라고 보므로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에서 국회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⑤ (나)에 '2명'이 들어가면, 병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2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21~22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⑤
05 ③	06 ⑤	07 ③	08 ②

01 헌법의 의미 이해

**문제 분석**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다. 따라서 A는 헌법이다.

**정답 찾기** ③ 헌법의 제·개정 주체는 국민이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은 법체계에서 가장 상위의 규범인 최고 규범이다.

② 헌법은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국가 권력의 소재와 행사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창설의 토대로서의 기능을 한다.

④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보장 규정을 두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⑤ 헌법은 다원화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 및 제도 등을 포함하여 이를 통한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02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은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통해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는 국정 감사를 통해 행정부 등을 견제한다.

**정답 찾기** ⑤ 제시된 헌법 내용에는 권력 기관 간 견제 수단이 부각되어 있다. 헌법은 국가 권력을 분립시키고 권력 기관 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사례에는 국가 성립에 필요한 국민의 자격, 영토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창설의 토대를 마련하는 헌법의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제시된 사례에는 시대와 사회의 지배적 가치관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헌법의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제시된 사례에는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헌법의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제시된 사례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다.

03 헌법의 의미 변천 이해

**문제 분석** 국가 기관 조직 및 구성, 국가 기관의 행위 방법, 국가 기관 간 상호 관계 및 활동 범위를 규정한 A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다. 또한 양도 불가한 자연적이고 신성한 시민의 권리 보장

을 전제로 하는 B는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정답 찾기** ②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권력의 제한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중시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③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국가 권력의 제한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한다.

④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⑤ 사회권 보장을 통한 복지 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이다.

#### 0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는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⑤ ㉠은 복지 국가의 원리, ㉡은 국제 평화주의, ㉢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다.

#### 0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실현 방안으로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활동 보장, 권력 분립을 통한 국가 권력의 남용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가)는 자유 민주주의,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③ 복수 정당제 보장,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른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실현 방안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며, 기초 연금 지급을 통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는 등 사회 보장 제도 시행을 실현 방안으로 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 0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의 원리 중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A는 자유 민주주의,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ㄱ.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복수 정당제의 보장을 들 수 있다.

ㄴ.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므로 국가의 사회 보장과 사회 복지 증진 노력 의무의 근거가 되는 원리이다.

ㄷ. ㉠이 '아니요', ㉡이 '예'라면, (가)에는 복지 국가의 원리의 특징을 묻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분립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중시하므로 (가)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ㄷ. 복지 국가의 원리는 자본주의로 인해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강조된 원리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질문이 들어가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 07 국제 평화주의의 이해

**문제 분석**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에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③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 보장을 중시하는 것은 문화 국가의 원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② 국제 평화주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소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관련된 설명이다.

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화적 통일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평화 통일 지향과 관련된 설명이다.

#### 08 복지 국가의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사회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통해 A가 복지 국가의 원리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사회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③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중시하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④ 국가 의사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23~25쪽

- 1 ⑤                      2 ⑤                      3 ①                      4 ③  
5 ④                      6 ②

### 1 헌법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필자는 헌법이 국가의 통치 체계를 의미하며 국가 통치 구조나 정부 형태와 관련된 권력 구조와 같은 정치적 권력 구조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헌법이 담고 있는 헌법적 권력 구조는 국가 운영의 본질적 원리를 의미한다. 즉, 헌법은 국가 통치 기구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가 조직 운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헌법은 국가 공동체의 법적 안정성과 평화가 유지 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없다.

②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없다.

③ 헌법은 정치적 혼란을 막고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 지배 현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없다.

④ 헌법은 현대 사회의 다원화된 다양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 및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 사회 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된 자료와 관련이 없다.

### 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여자·연소 근로자의 보호, 국가 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 기회의 보장과 여자, 노인, 신체 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② 평화 통일 지향은 국가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된다.

③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④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이 국민 투표를 통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과 평생 교육의 진흥을 실현 방안으로 들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또한 보통 선거권의 보장과 국민 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확충을 실현 방안으로 들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자료에서 교사가 두 학생 모두 옳게 대답했다고 했으므로 A는 문화 국가의 원리, B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정답 찾기** ①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개인의 문화적 자유와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문화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법률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③ 국민 생활의 실질적 평등 실현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④ 국민 주권주의, 문화 국가의 원리 모두 국회의 입법 및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의 기준이 된다.

⑤ 국민 주권주의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볼 수 없다.

### 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복수 정당제를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원리인가?’라는 질문에 ‘예’에 해당하는 B는 국민 주권주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예’에 해당하는 C는 국제 평화주의이므로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③ 헌법의 기본 원리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지도 원리로서 입법권의 범위나 한계, 국가 정책 결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따라서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는 모두 국가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복지 국가의 원리는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강조된 원리이다.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④ ‘복수 정당제를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원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국제 평화주의는 ‘아니오’에 해당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되는 원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복지 국가의 원리와 국민 주권주의 원리 모두 ‘아니오’에 해당하므로 ㉠~㉣ 중 ‘예’에 해당하는 것은 0개이다.

⑤ 국민 주권주의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국가 권력의 원천으로 보는 원리이다. 따라서 (가)에는 해당 질문이 들어갈 수 없다.

###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국민의 사회권 보장, 국민 건강 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 시행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A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며,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B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정답 찾기** ㄱ.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ㄴ.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국제법 존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우리나라 헌법 내용은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ㄷ. 자유 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법치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ㄹ.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침략적 전쟁의 부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6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국민의 최소한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따라서 A는 문화 국가의 원리, B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정답 찾기** ② 복지 국가의 원리는 사회 보장 제도 실시의 근거가 되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통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하는 헌법의 기본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유 민주주의 원리는 권력 분립에 의한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강조한다.

③ 문화 국가의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 모두 국가 운영 원리의 기준이 되어 법률 제정과 정책 시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④ 국제 평화주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문화 국가의 원리도 국가의 문화를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적 자유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 03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수능 기본 문제		분문 30~31쪽	
01 ①	02 ①	03 ①	04 ②
05 ④	06 ①	07 ④	08 ③

### 01 기본권의 의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에서 확인되어 그 최고법적 효력으로서 보장되는 규범화된 실정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권리인 A는 기본권이다.

**정답 찾기** ① 기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기본권은 일정한 요건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③ 기본권의 유형 중 자유권 등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④ 기본권은 국가 권력 행사의 절대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해 준다.

⑤ 인간의 존엄, 자유권 등은 국가 성립 이전에도 존재하는 초국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02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 배제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청구권은 국민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에 의해 침해당하였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찾기** 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배제하는 방어적 성격의 권리인 A는 자유권이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인 B는 청구권이다. 따라서 C는 사회권이다.

### 03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참정권에 관한 헌법 조항이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헌법 조항은 자유권에 관한 헌법 조항이다. 따라서 A는 참정권, B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① 참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사

회권이다.

- ③ 자유권은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 ④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⑤ 자유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04 평등권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법 조항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당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A는 평등권이다.

**정답 찾기** ② 평등권은 모든 국민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른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평등권도 기본권으로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권리이다.

- ③ 사회권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이다.
- ④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⑤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의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 05 참정권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지방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을은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참정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참정권은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대우를 금지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② 사회권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③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⑤ 청구권은 국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06 기본권 제한의 이해

**문제 분석** ○○법 조항은 국회 의장 공관의 일정 범위 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즉,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ㄱ.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해야 보장되는 소극적 권리이다.

ㄴ. 헌법 재판소는 ○○법 조항이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형식적인 요건은 법률로써의 제한을 의미하므로 헌법 재판소가 해당 요건의 충족을 강조하

었다고 볼 수 없다.

ㄹ.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현대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 07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최저 임금 제도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이다. 이런 사회 보장 제도 실현과 관련된 기본권은 사회권이므로 A는 사회권이다. 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유권의 내용이다. 따라서 B는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④ 자유권은 사회권과 달리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침해의 배제를 통해 보장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② 자유권은 일정한 제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③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⑤ 자유권은 구체적인 내용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성격의 권리이다.

### 08 기본권 제한의 요건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검정고시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 교육청 공고가 자신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같은 사회권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정답 찾기** ㄱ.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에 해당한다. 사회권의 보장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

ㄷ. 헌법 재판소는 검정고시 재응시 자격 제한은 과잉 금지의 원칙 중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는 부합하나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에 '과잉 금지의 원칙'이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 소송 당사자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제시된 자료에서 해당 공고는 갑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아니므로 갑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32~35쪽

<b>1</b> ③	<b>2</b> ⑤	<b>3</b> ①	<b>4</b> ④
<b>5</b> ③	<b>6</b> ②	<b>7</b> ⑤	<b>8</b> ②

**1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중 국가 권력의 간섭 및 침해 받지 않아야 실현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이므로 A는 자유권이다. (가), (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B, C는 각각 사회권과 참정권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③ 국민이 국가 기관 구성에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참정권이다. 이에 A가 자유권이므로 C는 사회권이다. 사회권의 보장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에 기여한다.

**오답 피하기** ①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 되는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자유권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사회권과 참정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가면 ㉠은 'B, C'이다.

⑤ 사회권은 B, C 중 하나이다.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므로 ㉡이 'B, C'라면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2 자유권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출국 금지 조치로 인하여 해외로 출장을 갈 수 없어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종교 행사 참여를 강요받아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유형은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⑤ 자유권은 자유로운 개인의 생활을 국가 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받지 않을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권리는 사회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③ 자유권을 수단이 되는 권리로 볼 수 없다.

④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는 권리는 사회권이다.

**3 청구권과 사회권 이해**

**문제 분석** 생명 및 신체 피해에 대한 구조금 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인 A는 청구권이다. 또한 범죄 피해자의

생계 보장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기본권인 B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①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절차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는 행복 추구권, 자유권 등으로 사회권을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없다.

③ 사회권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④ 청구권과 사회권은 모두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하는 권리이다.

⑤ 사회권은 현대 복지 국가 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권리이다.

**4 평등권과 사회권 이해**

**문제 분석** 근로자의 날에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인 갑은 출근하게 되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하여 A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A는 평등권이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게 되어 해당일에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된 의사 교환 및 노동조합 집회를 통한 소통의 시간이 봉쇄되어 근로 3권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B는 사회권이다. 그리고 사회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답안은 틀린 내용이다. (가)의 내용에 따라 ㉠은 '0' 또는 '1'이 된다.

**정답 찾기** ㄴ.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ㄷ. ㉡이 '1'이면, (가)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평등권과 달리 사회권은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보장되는 권리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소극적·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ㄷ. 국가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은 '0'이다.

**5 문화 국가의 원리와 자유권 이해**

**문제 분석** 문화의 육성 및 진흥의 과제를 수행해야 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A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또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모두 자유권의 내용이므로 ㉠은 자유권이다.

**정답 찾기** ㄴ. 문화 국가의 원리는 국민의 자율적인 문화 활동 보장과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국가 정책 방향의 기준이 된다.

ㄷ.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ㄱ.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지위 보장을 실현 방안으로 들 수 있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ㄷ.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능동적 권리는 참정권이다.

### 6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A는 자유권이고, 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B는 사회권이다.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는 입장인 C는 참정권이다.

**정답 찾기** ②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사회권이다.

③ C는 참정권이다. 시각 장애인만 안마 시술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에 의하여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는 비시각 장애인의 기본권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들 수 있지만 참정권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례는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는 자유권이다. B는 사회권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참정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이 '예'이면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7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애국지사과 ○○ 공로자를 달리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A가 평등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로 수당 지급액이 과소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를 보장하였으므로 B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B는 사회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C는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성격을 갖는다고 했으므로 자유권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⑤ 적극적 권리인 사회권과 달리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침해를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②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되는 권리는 평등권이다.

③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다.

④ 평등권에서의 평등은 국민의 실질적·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사회권 보장을 통해 국민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

### 8 기본권 제한의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했지만 관할 경찰서장이 법률에 근거 없이 집회 신고를 반려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②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기본권 제한 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헌법 재판소는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③, ④, ⑤ 헌법 재판소는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 신고 반려 처분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해당 처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집회 신고 반려 처분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방법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 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36~37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③

## 01 법치주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주어진 자료에서 명목상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법치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법치주의의 유형 A는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유형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정답 찾기** ③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오답 피하기** ① 형식적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 행사 시 의회가 미리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본다.

②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률보다 헌법이 우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⑤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02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정치를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위한 국가의 고유한 활동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감의 관점은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⑤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국가 이외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치 현상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정치를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라는 정치 주체에 국한하여 정치의 의미를 규정한다.

②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③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넓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국회가 국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④ 좁은 의미로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국가 수준의 정치 현상만을 정치로 보기 때문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 03 기본권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기본권 유형 중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지 않으므로

써 보장되는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A는 자유권, 국가의 적극적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보장되며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B는 사회권이다.

**정답 찾기** ① 자유권은 헌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보장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오답 피하기** ②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 기관의 형성에 참여하거나 국가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자유권, 사회권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④ 사회권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⑤ 청구권은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04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이해

**문제 분석** 국제 평화주의와 관련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조항이 직접 나타내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A는 평화 통일 지향이다.

**정답 찾기** ③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평화 통일 지향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②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권력의 창설이 국민의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④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⑤ 문화 국가의 원리는 학문과 예술 및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04 정부 형태

수능	기본 문제	본문 41쪽
01 ②	02 ①	03 ②
		04 ①

## 01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선출하며, 대통령제는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가)에는 의원 내각제와 구분되는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 정답 찾기** 가. 대통령제는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나.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르.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 0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 정답 찾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총리 또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행정부 수반이 의회 해산권 행사를 통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모두 의회 의원은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다.  
 ④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국정 수행의 안정성과 정책의 지속성 확보가 용이하다.  
 ⑤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 03 정부 형태에서의 견제 방법 이해

**문제 분석**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된 정부 형태인 A는 대통령제이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정부 형태인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②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소추할 수 있는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의원 내각

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①, ③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및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서 동의 및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04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A는 의원 내각제이다. 따라서 B는 대통령제이다.

- 정답 찾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인 총리는 의회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②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우리나라에서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한다.  
 ④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다.  
 ⑤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모두 국민의 선거로 의회 의원을 선출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42~44쪽
1 ①	2 ④	3 ⑤
5 ②	6 ①	4 ⑤

## 1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 정답 찾기** ①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② 의회가 불신임권을 통해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③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 의원은 총리 또는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④ 의원 내각제는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일치하지 않는다.  
 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2 전형적인 정부 형태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이며,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교사의 평가에서 세 가지는 옳게 작성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옳지 않게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답 찾기** ④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나)에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제에서는 의회 의원만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내각은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는 모두 국민의 선거로 의회가 구성된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구분할 수 없다.

⑤ ‘행정부 수반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나)에 들어가면, (가)에 옳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는 대통령제의 특징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3 대통령제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의 경우 D당의 의회 의석률이 53%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였는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C당이라는 것을 통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며, ‘행정부 수반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는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정답 찾기** ⑤ ㉠이 ‘2점’이면, (가)에 대통령제의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므로 ㉠은 ‘3점’이 될 수 없다.

② 의원 내각제에서 의회는 내각에 대하여 총사퇴를 요구할 수 있는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다.

③ 대통령제에서 의회는 행정부 수반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④ 해당 내용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므로 해당 내용이 (가)에 들어가면 ㉠은 ‘2점’이다.

### 4 전형적인 정부 형태 및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상호 의존적인 A는 의원 내각제이며,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에 더 충실한 B는 대통령제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정부 형태이다.

**정답 찾기** ⑤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가 의회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요소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 행사 등을 통해서 행정부 수반이 임기 중에 물러날 수 있으므로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②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③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므로 (나)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 위원을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 5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서 국무총리를 두어 행정 각부를 통괄하게 하는 것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2명이 갑, 병이라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며, (나)에 대통령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무 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원 내각제 요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ㄴ. 2명에 을이 포함되어 있으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ㄴ. 2명에 갑이 포함되어 있으면, A는 의원 내각제, B는 대통령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연대하여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진다.

ㄷ. 2명이 을, 병이라면, A는 대통령제, B는 의원 내각제이며, (가)에는 대통령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국민의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제 요소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6 전형적인 정부 형태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여대야소 정국이 형성되고,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된다. 의원 내각제에서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였다면 단독 내각이 구성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정답 찾기** ㄱ. 갑국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립된 정부 형태라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을국이 의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3개만 존재하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ㄴ. 을국이 의회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2개만 존재하는데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 의회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면, 을

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의 선거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ㄷ. 책임 정치에 유리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ㄹ.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갑국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을국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 05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수능 기본 문제		본문 50~51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7 ②	08 ④

### 01 국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 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②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①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은 국무 회의이다.

③ 대통령은 국회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약을 체결하거나 비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⑤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 02 헌법의 개정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 개정은 제시된 그림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일정 기간 공고 후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확정되면 즉시 공포된다.

**정답 찾기** ㄷ.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이때 확정을 위해서는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ㄹ. 국민 투표에서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ㄱ.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ㄴ.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 03 대통령의 권한 통제 수단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며 이를 위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권한의 신중한 행사를 위해 행정부 내부는 물론 다른 국가 기관에 의한 다양한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 국무 회의의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 위원이 부서한다.

④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통령령은 명령에 해당하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04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따라서 A는 감사원, B는 대통령, C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④ 국회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정 감사권과 국정 조사권은 모두 국회의 권한이다.

②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③ 국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은 국회의 권한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 기관이다.

## 05 사법권의 독립 이해

**문제 분석** 법원 자체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을 통해 실현되는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직무상의 양심과 소신에만 입각하여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이다.

**정답 찾기** ③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행정권에 대한 사법권의 우위 확보는 사법권의 독립 목적과 거리가 멀다.

②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 목적과 거리가 멀다.

④ 국민의 재판 참여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은 국민 참여 재판 제도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법관의 오심으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것은 심급 제도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 06 심급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는 하급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상소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3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ㄴ. 1심 판결 선고 후 재판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

우 일정 기간 내에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ㄷ. 3심을 담당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답 피하기** ㄱ.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는 항소,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는 상고이다.

ㄴ. 사건에 따라 2심을 고등 법원이 아닌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 07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재판소는 헌법 해석을 통해 헌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정부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는 정당 해산 심판과 국회의 소추에 의해 진행되는 탄핵 심판 등을 관할한다. 따라서 A는 헌법 재판소, B는 정부, C는 국회이다.

**정답 찾기** ㄱ.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은 정당 해산 심판이고,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법관 등이 그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국회의 소추에 의해 그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은 탄핵 심판이다.

ㄴ.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오답 피하기** ㄴ. 재판의 상고심을 담당하는 것은 대법원이다.

ㄷ. 정당 해산 심판의 청구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정부이다.

## 08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A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B는 위헌 법률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④ 소송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재항고는 2심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이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② △△ 지방 법원과 헌법 재판소 모두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다.

③ 헌법 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갑은 해당 법률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계속 재판을 받게 된다.

⑤ A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니라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고,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이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52~55쪽	
1 ③	2 ④	3 ⑤	4 ③
5 ⑤	6 ③	7 ②	8 ⑤

### 1 입법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법률 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법률 개정 절차와 달리 헌법 개정 절차에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가 있다. 한편 법률 개정안은 국회 의원 외에 정부도 제출할 수 있으며,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원 외에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갑의 답안 중 옳은 내용이 두 개여야 하므로 (가)에는 법률 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의 공통점으로 옳은 내용이 들어야 한다.

**정답 찾기** 나.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 법률 개정 절차와 헌법 개정 절차에서 공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오답 피하기** 가. 법률 개정 절차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고,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회 의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공포를 앞두고 있어도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에 의해 확정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면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고 확정된 헌법 개정안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

###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따라서 A는 대통령이다.

**정답 찾기** ④ 외국 정상과 회담을 갖고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갖는 권한 중 대외적 국가 대표권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②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통령은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의장이다.

⑤ 대통령이 교육부·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3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각각 국무 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이다. 국무 위원의 해임 건의권은 국무총리와 국회가 갖고,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갖는다. 따라서 A는 대법원장, B는 국회, C는 대통령, D는 국무총리이다.

**정답 찾기** ⑤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오답 피하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회는 대통령의 주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④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인 국무 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 4 심급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항소심 판결문이다. △△ 고등 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답 찾기** 나. 항소심을 담당할 법원이 고등 법원이므로 해당 사건의 1심 재판은 지방 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오답 피하기** 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는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르.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 판결로 원고의 청구 기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5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가)~(라)는 모두 우리나라 국가 기관에 대한 내용상 오류가 있다. 국정 조사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무총리는 대법원장을 임명 제청할 권한이 없으며, 국회는 헌법 재판소장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고,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정답 찾기** 을. 국무총리는 국무 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진다.

병.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가진다.

정.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갑. 국정 조사나 국정 감사는 모두 감사원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다.

## 6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A는 위헌 법률 심판,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나. 재판을 받던 갑이 법원에 제청을 신청한 A는 위헌 법률 심판이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 재판소에 직접 청구한 B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다. □□ 지방 법원은 갑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 지방 법원과 헌법 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다르게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는 것은 헌법 소원 심판이 아니라 위헌 법률 심판이다.

르.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근로의 권리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이 아니라 6개월 미만 근무한 월급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 7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A는 헌법 재판소, 상고를 기각한 B는 대법원이다.

**정답 찾기** ② 대법원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재항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③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9인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대법원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헌법 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헌법 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을 담당한다.

## 8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 견제 수단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국가 기관 간의 견제 수단 중 탄핵 소추권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국회)가 행정부(대통령 포함), 사법부(법원)를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와는 달리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은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다.

**정답 찾기** ⑤ 대통령과 법관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대법원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따라서 탄핵 소추권과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은 국회가 법원과 대통령을 모두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가)에 '법원과 대통령이 모두 견제 대상에 포함되는가?'가 들어가면 '예'라는 답이 2개여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 중 '예'는 2개이다.

②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이다. ㉠~㉣ 중 '아니요'는 2개이다.

③ ㉠이 '아니요'라면 A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권이므로 ㉢은 '예'이다.

④ 사면권은 행사 주체가 대통령이다. 따라서 '권리 행사 주체가 사면권의 행사 주체와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C 모두 '아니요'라고 답해야 하므로, (가)에 해당 질문은 들어갈 수 없다.

# 06 지방 자치

수능 기본 문제		본문 59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⑤

## 01 지방 자치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지방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인 A는 지방 자치이다.

**정답 찾기** ㄱ. 지방 자치는 주민이 선출한 기관이 직접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ㄴ.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모두 주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된다.

ㄷ.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지방 자치 단체 내에서의 수평적인 의사 소통 구조가 확립되면 지방 자치 행정의 민주성이 제고될 수 있다.

## 02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으로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있다.

**정답 찾기** ②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 집행 기관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 모두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다.

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달리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폐지권을 가진다.

## 03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확정권을 갖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확정권을 가지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지방 의회, '아니오'라고 답한 B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정답 찾기**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인기 중에 주민 소환 투표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즉,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의회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모두 주민의 직

접 선거로 선출 또는 구성된다. 따라서 ㉠은 '예'이다.

㉡ 지방 자치 단체 사무의 집행 기관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조례 제정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⑤ 지방 자치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간에 수직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다.

## 0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 주민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지방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제반 환경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제시된 자료에서 주민 발안 제도와 같은 주민 참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관련 제도 활용을 위한 제반 환경이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주민 참여에 주민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들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제시된 사례에 나타난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60~61쪽	
1 ①	2 ③	3 ②	4 ⑤

## 1 지방 자치의 유형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의 유형 중 주민 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지방 자치를 의미하며, 단체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 자치를 의미한다.

**정답 찾기** ① 단체 자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지역 사무를 처리하므로 정치권력이 중앙 정부로 집중되는 것을 막는 수직적 권력 분립에 기반을 둔다.

**오답 피하기** ② 주민 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에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지방 자치를 의미한다.

③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행하는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정치 형태를 가리키므로 주민 자치를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④ 주민 자치와 단체 자치 모두 지방 자치의 유형으로서 지방 자치 단체의 고유 사무에 관한 자치권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⑤ 주민 자치적 요소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지방 자치에서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주민이 편성된 예산안을 확정할 수는 없다.

## 2 지방 자치 단체 기관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에서와 같이 오늘날 지방 자치는 주민이 선출하는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같은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한 대의제적 지방 자치 제도가 보편화되었으며 주민 소환, 주민 발안과 같은 직접 민주제적인 자치 제도의 운영을 통해 지방 자치를 보완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우리나라에서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을 통해 지역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정치권력이 중앙 정부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지방 의회 의원으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이 선출된다.

④ 우리나라에서 지방 의회 의원 중 지역구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권한이 지방 의회에 있다.

## 3 주민의 지방 자치 참여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주민 투표 제도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이고, 주민 소환 제도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이다. 그리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제안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이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제도(주민 발안 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답 찾기** ㄱ. 지방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 의원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ㄷ.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따라 주민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예산에 대한 심의 및 확정 권한은 지방 의회에 있다.

**오답 피하기** ㄴ. 주민 투표의 대상은 지방 자치 단체의 모든 결정 사항이 아니라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이다.

ㄹ. 주민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청구를 조례 제정 권한이 있는 지방 의회에 해야 한다.

## 4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서 필자는 지방 자치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지방 정부 스스로의 역량을 통해 지방 자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제시문에서 필자는 지방 자치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지방 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내재하고 있는 역량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가 지방 자치의 문제점으로 중앙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제시문과 관련이 없는 진술이다.

**I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62~63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1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는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며,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갖는 B는 지방 의회이다.

**정답 찾기** ⑤ 지방 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편성한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오답 피하기**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 제외)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② 법률에 대한 개정 권한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며, 지방 의회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권을 가진다.

③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가진다.

④ 지방 자치 단체의 행정 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은 지방 의회가 가진다.

**02 우리나라 국가 기관의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 헌법 기관 중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대법원, D는 국무 총리, E는 대법관, F는 헌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②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국회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대통령은 국회에 임시회 집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정 감사는 국회의 권한이다.

③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선거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루어진다.

④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부의장으로 국무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⑤ 대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03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권한 이해**

**문제 분석** A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A는 2심 법원이며, 헌법 소원 심판이 진행된 B는 헌법 재판소이다. 갑이 항소심 계속 중 해당 법률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갑의 신청을 기각하자 갑은 헌법 재판소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가)는 위헌 법률 심판, (나)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정답 찾기** ④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

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 재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다. 따라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재판 당사자이며, 법원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담당한다.

②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되었으므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갑의 배출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③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가진다.

⑤ 위헌 법률 심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 모두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04 정부 형태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의 t 시기 행정부 수반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므로,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t~t+2 시기 중 정부 형태는 1회 변경되었으므로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며, B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을 차지하였으므로 ㉔은 B당이다.

**정답 찾기** ④ ㉒과 ㉔이 동일하다면, ㉒, ㉔은 B당이다. B당의 의회 의석률이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며,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다.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② t+2 시기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이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이다.

③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이므로,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⑤ ㉒, ㉓, ㉔이 모두 동일하다면, ㉒, ㉓, ㉔은 모두 B당이며, t 시기와 t+1 시기의 정부 형태는 모두 대통령제이다. 의회가 내각 불신임권을 갖는 것은 의원 내각제이다.

## 07 선거와 선거 제도

수능 기본 문제

본문 68~69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5 ②      06 ⑤      07 ⑤      08 ⑤

### 0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선거는 국민이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직자를 투표로 선출하는 행위로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가), (나)는 선거가 갖는 기능 중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와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을 설명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합법적인 선거 절차를 거쳐 구성된 정치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기반으로 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선거의 기능 중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한편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제도 등에 관해 배울 기회를 갖는다. 이는 선거의 기능 중 정치 교육의 장(場) 제공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④ 선거의 기능 중 정치권력 통제 기능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재선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론 형성 및 반영 기능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집약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기능은 모두 (가), (나)와는 거리가 멀다.

### 02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성별,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을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권자인 국민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① 보통 선거는 재산, 학력, 성별,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② 평등 선거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 및 각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③ 직접 선거는 유권자가 대리인(중간 선거인)을 거치지 않고 대표자를 직접 투표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④ 비밀 선거는 유권자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⑤ 간접 선거는 민주 선거의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 03 선거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A국의 한 선거구에서 세 명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으므로 A국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로 중·대선거구제를, B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가)는 중·대선거구제, (나)는 소선거구제이다.

**정답 찾기** 나.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 소수당 후보자들의 의회 진출에 유리하다.

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오답 피하기** 가. 상대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르.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이다.

### 04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채택된 대표 결정 방식 B는 절대다수 대표제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 채택된 대표 결정 방식 A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다.

**정답 찾기** ④ 절대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오답 피하기** ① 선호 투표제는 절대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② 상대적으로 사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은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③ 단순 다수 대표제와 절대다수 대표제 모두 소선거구제에 적용될 수 있다.

⑤ A는 단순 다수 대표제, B는 절대다수 대표제이다.

### 05 비례 대표제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을 통해 소선거구제로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는 방식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비례 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정답 찾기** ② 비례 대표제는 사표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오답 피하기** ① 선거 제도 개편 이전에는 선거구당 1명씩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었다.

③ 비례 대표제 도입으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은 용이해진다.

④ 비례 대표제 도입으로 각 정당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선거 제도 개편으로 의회 의원은 전국 단위에서 선출되므로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될 때에 비해 지역 대표로서의 위상이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6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갑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구 수는 100개인데 지역구 의원은 200명이므로 지역구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이다. 한편 정당 투표 득표율이 2%인 C당이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것을 통해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발생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단위: %)

구분	총의석률	지역구 의석률	비례 대표 의석률
A당	60	60	60
B당	30	25	40
C당	10	15	0
합계	100	100	100

**정답 찾기** ⑤ B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39%, 총의석률은 30%이다. A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59%, 총의석률은 60%이고, C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은 2%, 총의석률은 10%이다.

**오답 피하기** ① C당은 정당 투표에서 2%를 득표하였으나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례 대표 의원 선거에서 C당을 선택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었다.

- ② A당은 지역구 의석률과 비례 대표 의석률이 같다.
- ③ 제시된 자료를 통해서 지역구 득표율을 파악할 수 없다.
- ④ 지역구 의원 선거에는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다. 따라서 C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가 모두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07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탄핵 소추권을 갖는 기관은 국회이다. 따라서 A는 국회 의원 선거이고, B와 C는 각각 광역 의회 의원 선거와 기초 의회 의원 선거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⑤ 지역구 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회 의원 선거와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이다.

- 오답 피하기**
- ① 세 가지 선거 모두 유권자가 1인 2표를 행사한다.
  - ②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은 광역 의회와 기초 의회이다.
  - ③ 세 가지 선거는 모두 지역구 의원을 단순 다수 대표제로 선출한다.
  - ④ 국회는 광역 의회, 기초 의회와 달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08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116조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ㄷ. 선거에 관한 경비를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

를 운영할 때 불가피하게 국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ㄹ. 헌법 제116조는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위해 선거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고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선거 공영제를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역할이지 선거 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역할이 아니다.

ㄴ. 선거구 획정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70~73쪽

- |     |     |     |     |
|-----|-----|-----|-----|
| 1 ② | 2 ② | 3 ⑤ | 4 ⑤ |
| 5 ② | 6 ④ | 7 ③ | 8 ⑤ |

### 1 선거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가 대표자나 정치권력을 심판할 수 있으므로 선거가 대표자나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제시문에서는 선거를 통해 대표자나 정치권력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표자 및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선거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 ① 선거는 국민의 주권 의식을 신장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③ 선거는 정치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선거는 국민들에게 정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선거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 표출의 장(場)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 제시문에서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 선거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을의 답안에 적힌 내용 두 가지가 중·대선거구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을의 점수가 2점이므로 A는 소선거구제, B는 중·대선거구제이다.

**정답 찾기** ㄱ. 상대적으로 선거 관리가 용이한 것은 소선거구제이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따라서 ①은 '2점'이다.

ㄷ. 우리나라 광역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는 소선거구제, 기초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다.

**오답 피하기** 나.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대표 결정 방식으로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할 수 있다.

ㄹ. 음의 점수가 2점이므로 (가)에는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상대적으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차이가 큰 단점을 갖는 것은 소선거구제이므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3 민주 선거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가)의 위반 사례에서는 선거권에 대한 제한이, (나)의 위반 사례에서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에 차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는 보통 선거, (나)는 평등 선거이다.

**정답 찾기** ⑤ 평등 선거는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표의 수뿐만 아니라 각 유권자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도 동등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모든 유권자에게 동일한 수의 표를 부여한다는 원칙은 평등 선거이다.

② 선거 시 투표용지에 유권자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은 비밀 선거에 위배된다.

③ 제한 선거는 보통 선거에 반대되는 원칙이다.

④ 선거권 연령 조정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원칙인 보통 선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 4 비례 대표제의 이해

**문제 분석** 제안된 B에 따르면 정당 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의 총의석수가 먼저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하여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이 이뤄진다.

**정답 찾기** ⑤ A를 적용할 때와 비교하여 제안된 B를 적용할 경우 정당 투표 득표율과 각 정당의 의석률 간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당 투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거대 정당의 과대 대표 및 소수 정당의 과소 대표 문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제안 취지로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는다는 것은 제시문의 맥락과 무관하다.

②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제시문의 맥락과 무관하다.

③ 비례 대표 의원 당선자를 확정하는 절차는 A에 비해 B가 더 복잡하다.

④ 비례 대표 의원 당선자를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시문의 맥락과 무관하다.

### 5 대표 결정 방식의 이해

**문제 분석** <현행안>은 단순 다수 대표제이고, <개편안>은 선호 투표제로서 절대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ㄷ. 절대다수 대표제는 단순 다수 대표제에 비해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는 데 적합하다.

**오답 피하기** 나. 선호 투표제는 절대다수 대표제에 해당한다.

ㄹ. 선호 투표제는 투표 후 필요할 경우 집계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투표를 여러 번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편안>과 <현행안> 모두 한 번의 투표로 당선자 결정이 가능하다.

### 6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유권자 유형별 정당 선호 순위를 근거로 <현행안>, <개편안>을 적용한 차기 대통령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행안> 적용 시: 최다 득표한 A당 후보자 당선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10	20

• <개편안> 적용 시

(1) 1차 집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획득 후보자 없음.

구분	A당	B당	C당	D당
득표율(%)	40	30	10	20

(2) 2차 집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획득 후보자 없음.

구분	A당	B당	D당
득표율(%)	40	40	20

(3) 3차 집계: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을 획득한 B당 후보자 당선

구분	A당	B당
득표율(%)	40	60

**정답 찾기** ㄱ.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 유효 투표 총수의 60%가 사표가 된다.

나.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 A당 후보자가 당선되고,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B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현재 B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와 달리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감국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이 발생한다.

ㄷ.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 A당 후보자가 당선되고,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B당 후보자가 당선된다.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와 달리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A당을 가장 선호하는 (가) 유형 유권자의 표는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여 사표가 된다.

**오답 피하기** ㄹ. (자) 유형 유권자의 표는 <현행안>을 적용할 경우와 달리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집계 방식에 따라 B당 후보자의 당선에 기여하여 사표가 되지 않는다.

### 7 선거구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선거구마다 단순 다수 대표제를 적용하여 최다 득표자 2명을 의원으로 선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중·대선거구제이고, (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여 최다 득표자 1명만을 선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소선거구제이다.

**정답 찾기** 나. 우리나라 기초 의회 의원 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유권자의 후보자 파악이 용이하다.

**오답 피하기** 가. 상대적으로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소선거구제이다.

라.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이다.

### 8 선거 결과 분석

**문제 분석** 최근 실시된 의회 의원 선거 결과와 그 결과를 기준으로 <개편안>을 적용한 차기 의회 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제1선거구	당선	당선	-	-
제2선거구	당선	당선	-	-
제3선거구	당선	-	당선	-
제4선거구	당선	당선	-	-
제5선거구	당선	-	당선	-
총의석수(석)	5	3	2	0
의석률(%)	50	30	20	0
득표수(표)	200	150	100	50
득표율(%)	40	30	20	10

• 차기에 <개편안> 적용 시: 제3선거구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A당과 C당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 대표 의석수는 달라질 수 있음.

구분	A당	B당	C당	D당
제1선거구	당선	-	-	-
제2선거구	-	당선	-	-
제3선거구	(미정)	-	(미정)	-
제4선거구	-	당선	-	-
제5선거구	당선	-	-	-
지역구 의석수(석)	3 (2)	2	0 (1)	0

정당 투표 득표율(%)	40	30	20	10
총의석수(석)	4	3	2	1
비례 대표 의석수(석)	1 (2)	1	2 (1)	1

**정답 찾기** ⑤ 현재 총의석수는 A당이 5석, B당이 3석, C당이 2석, D당이 0석이다.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A당은 4석, B당은 3석, C당은 2석, D당은 1석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서 2차 투표를 가 진행되는 선거구는 제3선거구 1개뿐이다.

②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제3선거구에서 2차 투표를 가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A당과 C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와 비례 대표 의원 당선자 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정당별 총의석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③ B당은 현재 지역구 의석률이 지역구 의석 10석 중 3석을 갖고 있어 30%인데,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B당은 지역구 의석 5석 중 2석을 획득하게 되므로 40%가 된다.

④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제3선거구에서 2차 투표를 가 진행되는데, 그 결과는 A당과 C당의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와 비례 대표 의원 당선자 수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만약 제3선거구 2차 투표 결과 A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의회 전체 의석수(10)를 곱하여 산출된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수만큼 배분되는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1석, C당이 2석이 된다. 반대로 제3선거구 2차 투표 결과 C당 후보자가 당선되면, 같은 방식에 의해 비례 대표 의석수는 A당이 2석, C당이 1석이 된다. 따라서 차기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비례 대표 의석수는 C당이 A당보다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

## 08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79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④

### 01 정치 과정 이해

**문제 분석** 정치 과정에서 A는 투입, B는 산출, C는 환류이다.

**정답 찾기** ② 이익 집단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책 결정 기구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집단은 정치 주체에는 해당하지만, 정책 결정 기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정치 과정에서 언론은 환류뿐만 아니라 투입에도 참여한다.

④ 개인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선거 참여는 산출이 아닌 투입 또는 환류 사례에 해당한다.

⑤ 투입, 산출, 환류 모두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 정치 외적 요소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02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 분석** 갑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하며, 을의 경우 시민 단체를 결성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ㄱ. 인터넷을 통한 정치 참여가 시민 단체 구성원이 되어 캠페인을 전개하는 정치 참여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적다.  
ㄴ. 개인적 정치 참여 방법, 집단적 정치 참여 방법은 모두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또는 기대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오답 피하기** ㄴ.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개인적 정치 참여,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은 집단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ㄷ. 개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나 시민 단체를 통해 집단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 모두 정책 결정 기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정치 과정에서 투입에 해당한다.

### 03 정당의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를 통해 정당의 기능 중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는 것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정당은 각종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고

대표자를 배출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한다.

ㄷ. 정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ㄴ.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인 정부이다.

ㄹ. 정치 사회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정당의 기능에 해당하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다.

### 04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 것은 정당이므로 A는 정당이다. 따라서 B는 이익 집단이다. (가)에는 정당과 이익 집단이 모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④ 이익 집단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정당, 이익 집단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③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위해 경쟁적 압력 행사를 하게 되면 사회 혼란이나 공익 저해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⑤ 정당, 이익 집단은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한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80~83쪽

1 ④

2 ②

3 ③

4 ①

5 ③

6 ①

7 ②

8 ④

### 1 정치 과정의 사례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법 개정과 관련된 정치 과정 사례이다.

**정답 찾기** ㄱ. ㉠은 정치 주체가 정책 결정 기구인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치 과정 중 투입으로 볼 수 있다. 정치 주체가 정치 과정 중 투입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ㄴ. △△ 단체, □□ 단체 등의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에 해당한다.

ㄷ. 정치 주체가 법 개정 이후 수술실 CCTV(폐쇄 회로 TV)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환류에 해당한다. 반면 국회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치 과정에서 산출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ㄷ. 정당은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정치 참여 집단 중 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다. 이익 집단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집단의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결성한 집단이다. 시민 단체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한 단체이다.

**정답 찾기** ㄱ. A가 정당, B가 시민 단체라면, C는 이익 집단이다. (나)에 이익 집단만 '예'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이익 집단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ㄷ. (나)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고, A가 시민 단체라면, B는 이익 집단, C는 정당이다. (다)에 정당과 시민 단체가 모두 '예'라고, 이익 집단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공익과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과 시민 단체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B가 이익 집단, C가 시민 단체라면, A는 정당이다. (다)에 정당과 시민 단체가 모두 '예'라고, 이익 집단이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당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ㄷ. (가)에 '공직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는가?'가 들어가고, (나)에 '특정 직업인으로 구성되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는가?'가 들어가면, A는 정당, C는 이익 집단이다. 따라서 B는 시민 단체이다.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 질문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 3 정당별 의석 분포 분석

**문제 분석** t 시기, t+1 시기의 정당 제도는 정권 교체가 가능한 대표적인 두 정당이 존재하는 양당제이며, t+2 시기의 정당 제도는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세 개 이상 존재하는 다당제이다.

**정답 찾기** ③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오답 피하기** ① 다당제가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민의를 국정에 반영하기에 용이하다.

② 양당제, 다당제는 모두 복수 정당제로서 민주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④ 갑국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t 시기의 경우 A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A당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것이므로, 행정부 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반면, t+2 시기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연립 내각이 구성될 것이므로, t 시기에 비해 행정부 수반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어렵다.

⑤ C당의 의석은 t 시기, t+1 시기 모두 5석으로 동일하지만, t+1 시기의 경우 C당은 A당 또는 B당과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

할 수 있다. 따라서 의회 내에서 C당의 영향력은 t 시기에 비해 t+1 시기는 증가하였을 것이다. t+2 시기의 경우도 C당은 A당 또는 B당과 연합하여 연립 내각을 구성할 수 있지만, 의회 의석률이 t+1 시기 2.5%에서 t+2 시기 24%이므로, 의회 내에서 영향력은 t+1 시기에 비해 t+2 시기는 증가하였을 것이다.

### 4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 분석** 학교 주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치 참여 방법으로 갑은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을은 시민 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명 운동에 참여하였다.

**정답 찾기** ①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가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치 참여 방법이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치 참여 방법에 비해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오답 피하기** ② 인터넷을 활용하여 국가 기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는 정치 참여 방법과 시민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치 참여 방법 모두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므로 을의 정치 참여 방법이 갑의 정치 참여 방법보다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갑, 을, 병은 모두 정치 참여 주체에 해당한다.

④ 개인이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 예산 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 과정 중 투입에 해당한다.

⑤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정치 주체에 해당하지만 정책 결정 기구는 아니다.

### 5 정치 참여 집단 이해

**문제 분석**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정답 찾기** ③ 정당은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와 의회를 연결함으로써 양자 간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오답 피하기** ①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이다.

②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④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정당은 모두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⑤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모두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 6 정당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문제는 A, B가 각각 양당제와 다당제 중 무엇인지에 따라 (가), (나)에 들어갈 수 있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답 찾기** ① A가 양당제라면, B는 다당제이다. 양당제가 다당제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B가 다당제라면, A는 양당제이다. 양당제가 다당

제보다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③ (가)에 '다양한 민의 반영 용이성'이 들어가면, A는 다당제, B는 양당제이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가 넓다.

④ (나)에 '소수의 이익 보호 가능성'이 들어가면,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양당제, 다당제 모두 민주적 정당 제도이다.

⑤ (가)에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성'이 들어가면, A는 양당제, B는 다당제이다. 다당제가 양당제보다 정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용이하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7 정치 참여 방법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고, 을은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방법으로 정치 참여를 하였으며, 병은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를 하였다.

**정답 찾기** ② 언론은 특정 사건이나 쟁점을 중점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므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방법은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정치 참여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필요는 없다.

③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나 선거에서의 투표는 모두 개인적 정치 참여에 해당한다.

④ 갑의 정치 참여 방법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민 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문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

## 8 정치 참여 주체 이해

**문제 분석**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 D는 언론이다.

**정답 찾기** ④ 정당은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만, 이익 집단, 시민 단체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이익 집단, 정당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②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정치 과정에서 산출을 담당하는 것은 정책 결정 기구인 의회에 해당한다.

③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은 모두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이익 집단은 시민 단체, 정당과 달리 특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형성한다.

**II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84~85쪽

01 ③      02 ⑤      03 ②

## 01 정치 과정의 이해

**문제 분석** 정치 과정은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 결정 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의 결정과 집행이 산출되고 정치 주체에 의한 평가 및 재투입 등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답 찾기** ㄴ. 피해자 단체가 정부에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물으며 해결 방안 등을 요구하는 거리 시위를 한 것은 투입에 해당한다.

ㄷ. 거리에 모여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온라인을 통해 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 참여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오답 피하기** ㄱ. 피해자 단체는 정치 과정에 참여한 정치 주체이지만 정책 결정 기구는 아니다.

ㄷ. 국회가 △△법을 제정한 것은 산출에 해당하고, △△법 시행 후 피해자 단체가 △△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것은 투입 또는 환류에 해당한다.

## 02 정치 참여 집단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이익 집단, B는 시민 단체, C는 정당이다.

**정답 찾기** 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참여 집단이며, 공식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함으로써 정치적 충원 기능을 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의회와 행정부를 매개하기 위해 당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이다.

②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다.

③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모두 정책 결정 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에서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이익 집단이다.

## 03 선거 제도의 이해

**문제 분석** 갑국은 현재 의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클수록 투표 가치의 차등이 심화된다.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내용 중에서 선거구 간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현재의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수 기준 '상하 33% 인구 편차'에서 '상하 20% 인구 편차'로 변경하는 것은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르. 갑국 대통령 선거 제도 개편안에서 당선을 위한 조건이 전체 유권자 수의 과반 득표가 아니라 유효 투표 총수의 과반 득표이므로, 투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전체 유권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오답 피하기** 나.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특정 정당이 20개의 선거구마다 2명씩 후보자를 공천하고 그 후보자들이 모두 당선된다면 그 정당은 의회 의석의 50%인 40석을 차지할 수 있다.

다. 갑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 개편안의 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제이며, 우리나라 지역구 광역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 제도는 소선거구제이다.

## 09 민법의 기초

수능 기본 문제

본문 89~90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①
05 ②	06 ⑤	07 ②	08 ②

### 01 공법과 사법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표는 공법과 사법을 비교한 것으로 질문에 대해 갑이 모두 옳게 답변한 것을 바탕으로 공법과 사법을 분류해야 한다. 'A는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갑의 응답이 '예'이므로 A는 사법이다. 따라서 B는 공법이다. 갑과 을의 점수를 통해 ㉠~㉢에 들어갈 답변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찾기** 다. 계약의 종류와 내용, 불법 행위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민법으로 사법에 해당한다. 갑은 질문에 대해 모두 옳게 답변했으므로 'B는 계약의 종류와 내용, 불법 행위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헌법은 공법에 해당하므로 '헌법은 B가 아닌 A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갑은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르. 을은 점수 2점을 받았으나 두 번째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했으므로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모두 옳게 답변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인 'A는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가?'라는 질문에 을은 '예'라고 답변해야 하므로 ㉢에 '예'가 들어간다. 헌법은 공법에 해당하므로 세 번째 질문인 '헌법은 B가 아닌 A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 을은 '아니요'라고 답변해야 한다. 따라서 ㉢에는 '아니요'가 들어간다.

**오답 피하기** 가. 사법에는 민법, 상법 등이 있고, 공법에는 형법, 헌법 등이 있다.

나. 개인 간에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법인 민법에 의해 규율된다.

### 02 민법의 내용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정답 찾기** ④ D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자 자녀들이 유언에 따라 D의 재산을 받는 것은 가족 관계를 규율한 사례이다.

**오답 피하기** ① A가 친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서점에서 책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② B가 회사 동료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은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③ C가 오토바이를 타고 운동을 하러 가던 중 행인을 실수로 치어 다치게 한 것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⑤ E가 실수로 친구의 노트북을 파손했을 때 E가 수리비를 배상한 것은 재산 관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03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환경 정책 기본법 제44조 제1항인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 오염 또는 환경 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다. 헌법 제23조 제2항인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적용된 조항이다.

**정답 찾기** ②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③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사상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가 인정되어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다.

### 04 사적 자치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A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개인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③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 05 민법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A법은 개인 간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다. (가)는 가족 관계, (나)는 재산 관계가 규정된 조항이다.

**정답 찾기** ㄱ. 우리나라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ㄴ. (가)는 친권과 관련된 조항으로 가족 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이다.

**오답 피하기** 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은 사회법이다.

ㄷ. (나)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 06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 이해

**문제 분석**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발생한 문제로 인해 각각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정답 찾기**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관계되는 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한다.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④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법률관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

### 07 계약 공정의 원칙 사례 분석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 위원회가 골프장 이용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 사례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보완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 있다.

**정답 찾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이라도 계약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약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③ 제시된 자료에서 계약 당사자가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해서 약관 조항이 시정된 것이 아니다.

④ 제시된 약관 조항의 내용이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없는 내용이라서 약관 조항이 시정된 것이 아

니다.

⑤ 제시된 약관 조항의 내용이 골프장 업체에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 배상 의무를 부담시켜 약관 조항이 시정된 것이 아니다.

### 08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개인의 소유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의미하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A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를 구속한다.

④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관계되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수능 실전 문제

문문 91~93쪽

- |     |     |     |     |
|-----|-----|-----|-----|
| 1 ① | 2 ⑤ | 3 ③ | 4 ② |
| 5 ③ | 6 ② |     |     |

### 1 민법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민법의 일반적인 특징과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관계의 사례에 대한 질문과 학생의 답안에 대한 채점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답안과 점수를 통해 (가), (나)에 들어갈 답안과 ㉠에 들어갈 점수를 추론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가) 답안에 대한 점수가 1점이므로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해당 내용은 민법의 일반적인 특징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있다.

ㄴ.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은 사회법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ㄷ. (나) 답안에 대한 점수가 1점이므로 (나)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병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사를 받은 것은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관계의 사례가 아니므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ㄹ. ‘갑은 을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였다.’는 민법이 적용되는 생활 관계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에 ‘1점’이 들어간다.

### 2 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구 실화(失火)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실화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만 한정하는 조항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실화는 실화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실화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로만 하는 내용은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A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⑤ 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따라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여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의 토양 환경 보전법 〇〇조항은 토양 오염에 대한 책임자를 특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화 책임자의 범위를 오염 토지의 소유자로 확장하였다. 이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③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관계되는 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토양 환경 보전법 조항은 정화 책임자의 범위를 오염 토지 소유자로 확장하여 공법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자료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자료에서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제시된 자료에서 토양 환경 보전법이 토지 소유자와 토양 오염 발생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제시된 자료에서는 오염 토지 소유자의 경우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4 계약 공정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〇〇 위원회가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모든 책임을 배제하고 있는 약관 조항을 무효라

고 판단한 사례로 계약 공정의 원칙과 관련 있다.

**정답 찾기** ②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의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공정하지 못한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③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④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5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보완한 민법의 기본 원칙인 계약 공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는 사적 자치의 원칙, B는 소유권 절대 원칙, C는 과실 책임의 원칙, D는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나. 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는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불합리한 연대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근거가 되었다.

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은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한다.

**오답 피하기** 가. 사적 자치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라. A, B, C는 모두 현대 사회에서 민법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된다.

## 6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수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는 반면에 농지 개량 조합에는 새로운 수로 개설을 위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그 피해가 극심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 법원의 판결은 민법의 기본 원칙인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에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은 재산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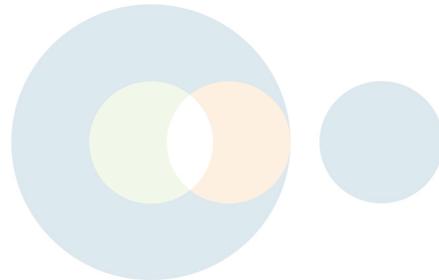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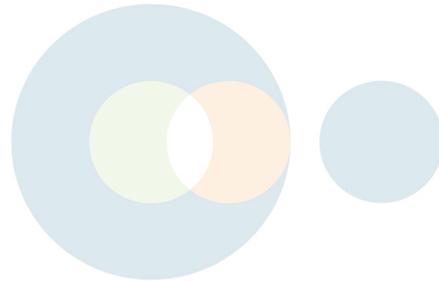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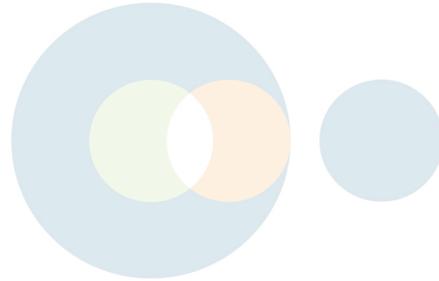
**오답 피하기** ① 소유권 절대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사적 지배를 인정한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기초하여 상대방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④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⑤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10 재산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99~100쪽	
01 ③	02 ⑤	03 ①	04 ⑤
05 ②	06 ②	07 ⑤	08 ②

## 01 무효와 취소 이해

**문제 분석** 무효는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행위 시에는 일단 법률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취소를 행사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에는 취소, ㉡에는 무효가 들어간다.

**정답 찾기** 나.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다. 당사자의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오답 피하기** 가.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률 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은 무효이다.  
 라. 무효와 달리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행위 시에는 일단 법률 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만, 취소를 행사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진다.

## 02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갑과 을의 계약과 관련된 상황이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이며,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정답 찾기** ⑤ 갑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로부터 두 달이 지나도록 을에게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있는데 이는 채무 불이행이다.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 을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전화로 부탁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이다.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야 계약이 성립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갑과 을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② 을이 갑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것은 갑의 청약을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다.

③ 계약은 계약서 작성과는 관계없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갑과 을이 금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갑과 을의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받아들일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된 ㉠ 시점에서 성

립되었다.

## 03 계약의 성립 이해

**문제 분석**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계약 당사자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에는 행위 능력이 들어간다.

**정답 찾기** ①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오답 피하기** ②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계약은 일단 법률 행위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가 있으면 법률 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

③ 도박에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로 무효이다.

④ 계약 당사자 간에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된 때 성립한다.

⑤ 계약 당사자가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춘 상태라도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04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해

**문제 분석**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를 특수 불법 행위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라고 한다. 제시된 사례에서 ○○ 법원은 피용자 갑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 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답 찾기** ⑤ ○○ 법원은 갑이 배달 업무와 관련하여 병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사용자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아니다.

②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사례에서 갑이 고의로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사용자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아니다.

③ 갑에게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갑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갑의 행위와 병의 손해 간에 상당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만 사용자 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는 아니다.

## 05 불법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불법 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

를 가한 행위이다.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  
 ㄷ.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포함한다.

**오답 피하기** ㄴ.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다.  
 ㄹ.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 06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미성년자인 갑, 을, 병의 계약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②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전자 대리점 사장에게 위조된 동의서를 믿게 한 후 고가의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은 자신의 행위 능력이 제한됨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용돈 범위 안에서 소셜책 구매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③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전자 대리점 사장에게 위조된 동의서를 믿게 한 후 고가의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과 을의 법정 대리인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는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인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한 상황에서 게임기 판매점 사장은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인 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07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인과 관계, 책임 능력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정답 찾기** ⑤ 어린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고, 심신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그러나 책임 능력이 없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피하기** ① 가해 행위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②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③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④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 08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두 번째 사례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② 책임 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심신 상실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이 경우 2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④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⑤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b>수능 실전 문제</b>		본문 101~104쪽	
1 ④	2 ④	3 ①	4 ②
5 ②	6 ③	7 ③	8 ④

## 1 일반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 이해

**문제 분석** 채무 불이행은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일반 불법 행위는 특별한 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가해 행위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다. 채무 불이행과 일반 불법 행위는 모두 위법 행위이므로 B에만 해당하는 특징의 서술에서 (나)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A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모두 옳은 내용이 서술된 것이므로 (가)에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A는 채무 불이행, B는 일반 불법 행위이다.

**정답 찾기** ㄴ. (나)에는 일반 불법 행위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

어가야 한다. 채무 불이행과 일반 불법 행위 모두 손해 배상 방식은 금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ㄹ. 일반 불법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요건이 있어야 성립한다.

**오답 피하기** ㄱ. (가)에는 채무 불이행에만 해당하는 특징이 들어가야 한다. 채무 불이행은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ㄷ. 계약 위반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만 그것만으로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2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이해

**문제 분석** 을, 병, 정은 갑에 대한 폭행 행위에 가담하여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정답 찾기** ④ 을, 병, 정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을, 병, 정 의 법정 대리인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을, 병, 정에게 재산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은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③ 을, 병, 정은 특수 불법 행위 중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⑤ 을, 병, 정 모두에게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을, 병, 정 의 법정 대리인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갑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 3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미성년자인 갑, 을 각각의 매매 계약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찾기** ① 미성년자인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한 후 병이 갑을 성년자로 믿고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오답 피하기** ②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판매업자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시된 자료에서 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은 을과의 계약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인 을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게임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과 을의 법정 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갑은 병에게 신분증을 위조하여 제시하였고, 병은 갑을 성년자

로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에서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병에게 성년자로 믿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병의 확답 촉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4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ㄱ. ○○ 법원은 B가 운영하는 골프장은 통상의 골프장과 같이 자연적 환경과 기상 상황을 그대로 이용 또는 감수할 것이 예정된 야외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고 지점은 다소 경사는 있지만 통상 성인이 스스로 사고 방지를 못할 정도의 급경사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B의 공작물 등의 소유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ㄹ. ○○ 법원은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A는 B에게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피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ㄷ. ○○ 법원은 사고 당시 1명의 경기 보조원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 지점처럼 스스로 주의할 것이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경기 보조원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주의를 고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 법원은 경기 보조원의 행위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 5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② A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갑에게 지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채무 불이행은 적법한 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이다. A는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③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작물 등의 점유자인 A가 상가 소유자와 함께 갑에게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④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가해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A의 갑에 대한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갑은 A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일차적으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책임이 면제되고, 공작물 등의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 6 특수 불법 행위 이해

**문제 분석** (가)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나)에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 (다)와 (라)에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③ 병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C를 폭행한 경우 병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D가 C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의 자녀 A(5세)가 베란다에서 돌을 던져 주차되어 있던 이웃 주민의 차량이 파손되어 갑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을의 고등학생 자녀 B(17세)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경우 B가 친구를 폭행하여 을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에 을의 자녀 B는 책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정이 E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음식점 건물의 창틀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을 경우에 점유자 정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 E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다)에 들어갈 수 없다.

⑤ 무(28세)가 F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다가 무가 한눈을 판 사이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쳤을 때 무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동물의 점유자 책임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라)에 들어갈 수 없다.

## 7 사용자의 배상 책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피용자인 을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정답 찾기** ③ ○○ 법원은 갑이 을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과

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갑과 을은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므로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② ○○ 법원은 을의 병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④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갑에게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⑤ ○○ 법원은 피용자인 을의 일반 불법 행위를 인정하였다. ○○ 법원은 을의 행위와 병이 입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 8 미성년자의 계약 이해

**문제 분석**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과 노트북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정답 찾기** ④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을은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이나 병의 법정 대리인은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②, ③, ⑤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을과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을이 자전거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여 불렀다.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이므로 갑은 사기를 이유로 자전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은 병과의 계약에 대해 병이 아닌 병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1 가족 관계와 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10~111쪽	
01 ④	02 ①	03 ②	04 ②
05 ③	06 ②	07 ③	08 ⑤

## 01 법률혼과 사실혼 이해

**문제 분석**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인 신고를 한 상태를 법률혼이라 한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는 사실혼이라고 한다.

**정답 찾기** ④ 배우자 간 부양 의무는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모두에서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① 법률혼 관계에서는 친족 관계(배우자, 인척 관계)가 발생한다.

② 법률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고,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③ 혼인은 혼인의 의사 합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

⑤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 02 일상 가사 채무의 연대 책임 이해

**문제 분석** 갑이 장기간 회사 일로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아내 을이 자녀들의 학원비와 간식비를 위해 돈을 빌렸을 경우 갑이 이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는 아내 을이 빌린 돈은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며,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인정되므로 남편인 갑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찾기** ① 일상 가사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일상 가사에 대해 부부간의 대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로 인해 생긴 채무에 대해 부부 중 다른 일방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자녀들의 학원비와 간식비는 일상 가사에 해당하므로 아내 을이 빌렸더라도 남편 갑이 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므로 갑은 을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을에게 계약 당시 의사 능력이 있는 것과 갑이 아내 을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③ 을에게 계약 당시 행위 능력이 있는 것과 갑이 아내 을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④ 돈을 빌릴 때 을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해서 갑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일상 가사 대리권과 일상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은 사실혼과 법률혼 모두에 해당된다.

## 03 혼인과 이혼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재판상 이혼, 두 번째 사례는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진 상황이다.

**정답 찾기** ② 갑과 을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는다. 협의상 이혼 시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병은 갑과 을의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갑과 을의 이혼으로 병이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재판상 이혼의 효력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 신고가 없더라도 발생한다.

④ A와 B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 C를 낳고 살았으므로 C는 A와 B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다.

⑤ A와 B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 04 상속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을의 이혼 소송 중에 을이 갑자기 사고로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은 배우자 갑, 직계 비속 A, 직계 비속 B이다.

**정답 찾기** ② 을의 사망 시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이므로 상속인은 배우자 갑과 직계 비속 A, 직계 비속 B이다.

**오답 피하기** ① 을이 사망하면 을의 재산을 배우자 갑, 직계 비속 A, B가 1.5 : 1 : 1의 비로 상속받는다. 따라서 A와 B가 받는 상속액은 같다.

③ B는 친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갑과 을의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되지만, 친생부모의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친양자 입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④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와 친자 관계가 형성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므로 B가 미성년자라면 을 사망 후 갑은 B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⑤ B는 친양자 입양을 통해 갑, 을과 친자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또는 생모 사이에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05 이혼과 상속 이해

**문제 분석** 갑과 C 모두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③ C는 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된다. C가 병의 친생부모인 을과 혼인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병을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갑과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만, 을과 병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도 법원에서의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가능하다.

② B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한다.

④ 갑이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갑의 재산은 갑의 배우자 A, 갑의 직계 비속 B가 상속받는다.

⑤ C는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C의 재산은 C의 배우자 을, 직계 비속 병이 상속받는다.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06 친권의 이해

**문제 분석**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친권은 미성년의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로 거소 지정권,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 재산에 대한 관리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A는 친권이다.

**정답 찾기** ②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

**오답 피하기** ①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모 중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한다.

③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의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만 미성년인 자녀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혼 시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도 있다.

⑤ 양자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이면 친생부모가 아닌 양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

### 07 상속의 이해

**문제 분석** 갑과 정이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만약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갑이 사망하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을, 직계 비속 병, 정이 1.5 : 1 : 1의 비로 상속받는다.

그 뒤 정이 사망하면 정 재산은 직계 존속인 을이 상속받는다.

**정답 찾기** ③ 갑의 재산은 14억 원이므로 을이 6억 원, 병이 4억 원, 정이 4억 원을 상속받는다. 그 뒤 정이 사망하면 정 재산 4억 원은 을이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갑과 정 사망으로 을은 총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 사망하면 을, 병, 정이 갑의 재산을 상속받는다. ② 갑이 사망하면 병, 정과 달리 배우자인 을은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④ 정은 유언 없이 사망했으므로 정 재산은 직계 존속 을이 상속받는다.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의 1순위 상속인인 직계 비속이 있으므로 갑의 배우자 을이 상속을 포기해도 갑의 직계 존속인 무는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08 이혼과 친자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협의상 이혼과 이혼의 법률 효과, 친양자 입양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나.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자녀는 서로 만나고 전화·편지 등을 통해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 교섭권을 가진다.

르. 병은 A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만, 친생부모인 갑이 병과 혼인한 것이므로 갑과 A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을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오답 피하기** 가.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12~115쪽	
1 ⑤	2 ①	3 ④	4 ⑤
5 ①	6 ④	7 ②	8 ③

### 1 협의상 이혼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협의상 이혼의 절차이다.

**정답 찾기** 나.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혼 숙려 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양육할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다.

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이혼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협의상 이혼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ㄱ. 민법에 정해진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한 것은 재판상 이혼이다.

## 2 상속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을의 유언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되 유류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자이며,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갖는다. 을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상속이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① 을이 질문자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을의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에 따른다. 이때 유언의 법률 효과는 을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오답 피하기** ② 을이 ○○ 복지 재단에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면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이 아니라 을의 사망 시에 유언의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③ 을이 ○○ 복지 재단에 10억 원의 재산을 모두 주겠다는 유언만이 효력이 있다면 이 유언에 따라야 한다. 을의 유가족 중 질문자와 A가 ○○ 복지 재단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때 질문자와 A, ○○ 복지 재단이 을의 재산을 균등하게 받는 것은 아니다.

④ ㉠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질문자는 을의 재산을 받을 수 있다.

⑤ ㉠과 ㉡이 모두 효력이 있는 경우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이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사망 당일 모든 재산을 질문자에게 주겠다는 유언에 따른다.

## 3 재판상 이혼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④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는 모두 이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갑과 을이 이혼해도 을과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② 이혼 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등과 그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하며 을이 법원에 면접 교섭권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협의상 이혼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⑤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공동

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도 행사할 수 있다.

## 4 이혼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재판상 이혼, 친권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⑤ 민법에 정해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협의상 이혼이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①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혼 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은 분할 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

②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이다.

③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진다.

④ 재판상 이혼에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 5 친자 관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친양자가 아닌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을 표로 구분한 것이다.

**정답 찾기** ㄱ.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가정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하며,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ㄴ. 친양자가 아닌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친양자가 아닌 양자 중 미성년자와 친양자는 모두 양부모가 친권자이다.

**오답 피하기** ㄷ. 친양자가 아닌 양자와 친양자 모두 양부모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양자가 아닌 양자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공통점으로 '양부모 사망 시 상속 관계 발생'이 들어갈 수 있다.

ㄹ.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고, 친양자가 아닌 양자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자 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나)에 들어갈 수 있다.

## 6 이혼과 상속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의 법적 판단에 대한 답변과 점수를 통해 ㉠~㉡에 들어갈 답변을 추론할 수 있다. A는 세 번째 법적 판단, 네 번째 법적 판단에 옳게 응답하였고, 두 번째 법적 판단에 틀리게 응답한 상황에서 채점 결과가 3점이므로 이를 통해 첫 번째 법적 판단에 옳게 응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B는 세 번째 법적 판단에 옳게 응답한 상황에서 채점 결과가 1점이므로 첫 번째 법

적 판단과 두 번째 법적 판단, 네 번째 법적 판단에는 틀리게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을과 정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원칙적으로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친 후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A는 첫 번째 법적 판단에 옳게 응답하였으므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에 '아니요'가 들어간다.

**오답 피하기** ① (가)에 A는 옳게 응답하였고 B는 틀리게 응답하였으므로 ㉠과 ㉡에 들어갈 답변은 서로 다르다.

② 혼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는 유지된다. 따라서 갑과 을의 이혼으로 갑과 병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두 번째 법적 판단에 B는 틀리게 응답하였으므로 ㉡에 '예'가 들어간다.

③ 을과 정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으므로 정이 유언 없이 사망하면 직계 비속인 무만 정의 상속인이 된다. 네 번째 법적 판단에 B는 틀리게 응답하였으므로 ㉡에 '예'가 들어간다.

⑤ 갑과 을의 이혼은 협의상 이혼으로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첫 번째 법적 판단에 B는 틀리게 응답하였으므로 (가)에 해당 내용이 들어가면 ㉡에 '아니요'가 들어간다.

## 7 상속 제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갑의 사망과 관련하여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했는지의 여부,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 ㉡, ㉢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②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 정과 직계 비속 A가 된다.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는다. 따라서 갑의 재산을 배우자 정, 직계 비속 A가 1.5 : 1의 비로 상속받아 정은 21억 원, A는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갑의 상속인은 배우자 정과 직계 비속 A이다.

③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정, 직계 비속 A와 직계 비속 B가 ○○ 대학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갑과 이혼하여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갑의 재산을 배우자 정, 직계 비속 A, 직계 비속 B가 1.5 : 1 : 1의 비로 상속받아 정은 15억 원, A는 10억 원, B는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⑤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면, A는 14억 원을 상속받는다. 갑이 B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갑의 유언장이 효력이 없는 상황이면, A는 10억 원을 상속받는다.

## 8 혼인과 이혼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문 중 일부이다.

**정답 찾기** 나. 부부 상호 간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는 사실혼과 법률혼에서 모두 적용된다.

다.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오답 피하기** 가. 민법에서는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혼을 하면 그때부터 성년으로 간주한다.

르.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거쳐야 하는 이혼의 유형은 협의상 이혼이다. 제시된 자료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IV 단원 기술 플러스** 본문 116~117쪽

**01** ①      **02** ⑤      **03** ③      **04** ③

**01 민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민법의 기본 원칙 중 A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고, B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정답 찾기** ㄱ. 우리나라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며,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ㄴ.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ㄷ.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면책되는 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ㄹ. 자신의 행위로부터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채 한 행위는 과실에 의한 행위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02 특수 불법 행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사용자의 배상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 따라서 공작물의 점유자인 A가 병에게 발생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A는 병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사용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②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청구하는 것이다.

③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동물 점유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④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 배상이 원칙이다.

**03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미성년자 A, B, C 각각의 법률 행위에 대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정답 찾기** ③ 병이 추인하면 정은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병이 추인하지 않은 경우에 정은 계약 체결 당시 B가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므로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용돈으로 게임기를 사는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A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A의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권리만을 얻는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첨된 고가의 자전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갑 또는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B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은 갑에게 B와의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⑤ 정과 B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확정된 경우에는 병이 계약 체결자가 아니므로 병은 정에게 자전거 매매 대금의 지급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04 가족 관계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자료는 협의상 이혼과 이혼의 법률 효과, 친양자 입양 및 친양자가 아닌 양자 입양과 관련된 것이다.

**정답 찾기** ③ 갑은 B를 입양하지 않았으므로 갑과 B 간에는 친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갑이 사망한 경우 B는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행정 기관에 이혼 신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② 병이 A를 친양자로 입양한 후에는 을과 A 간의 친자 관계는 종료되므로 을에게는 A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없다.

④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할 경우 가정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⑤ 친양자가 아닌 양자로 입양하면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12 형법의 이해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23~124쪽

01 ②      02 ③      03 ①      04 ⑤  
05 ②      06 ③      07 ①      08 ①

### 01 형법의 의미와 기능 이해

**문제 분석** 형법의 개념(의미)을 설명하는 글을 제시하고, 선지를 통해 형법의 기능까지 묻는 문항이다. 형법은 형식적 의미(좁은 의미)에서는 ‘형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하지만, 실질적 의미(넓은 의미)에서는 법의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을 의미한다.

**정답 찾기** ㄱ. 형법의 보장적 기능은 국가가 행사할 형벌권의 내용과 한계를 분명히 하여 국가의 자의적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능은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ㄷ. 도로 교통법에도 위반할 경우 형사 제재(벌칙)를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은 넓은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ㄴ. 형법은 범죄 및 형벌과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공법(公法)이다.

ㄹ. 좁은 의미의 형법이든 넓은 의미의 형법이든 형법은 국가의 형벌권을 통해 사회적 근본 가치를 보호하며, 범죄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응징과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 02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밑줄 친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이다. 죄형 법정주의의 의미 변천과 파생 원칙들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정답 찾기** ㄴ.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유추 해석 금지에 대한 설명이다.

ㄷ. 오늘날에는 성문의 법률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뿐만 아니라 그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적정한 것인지도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ㄱ.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 인권 사상을 배경으로 나타난 것이다.

ㄹ. 죄형 법정주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해당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03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된 판례를 제시

하고,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정답 찾기** ①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은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중 하나이다. 제시된 두 판례에서는 모두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성질의 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유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관습 형법과 같은 관습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법과 같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확신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판례들은 관습 형법과는 관련이 없다.

③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판례들이 법률 조항의 불명확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와 이에 대한 형벌 간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판례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⑤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로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제시된 판례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 04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고, 그 다음으로 위법한지 판단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답 찾기** 을.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따라서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행위는 B에 해당한다.

병. C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도 있지만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즉,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다.

정. 어떤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로 성립하는 행위는 D뿐이다.

**오답 피하기** 갑.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는 A, B, C이다.

### 0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을이 상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검사가 을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아 기소하지 않은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② 검사는 을의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오답 피하기** ①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을이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③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며,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정당방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논리적 순서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검사는 을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없다고 본 것이다.

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행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검사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행위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

### 0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두 번째 사례는 을의 연령으로 인해 을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③ 을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을의 연령이 14세 미만이라 을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②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 미성년자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 ④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 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갑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을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을에게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한 결과, 책임 조각 사유(형사 미성년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
- ⑤ 갑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을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 을의 행위는 모두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 07 형벌 및 보안 처분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형법에 규정된 다양한 형벌을 보여 준다. 형벌은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보안 처분은 형벌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대안적 형사 제재로서 징역과 함께 부과될 수 있다.

ㄴ. 징역이 금고나 구류와 다른 점은 정해진 노역(勞役)에 복무하게 한다는 점이다. 금고나 구류는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될 수는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자격 상실과 자격 정지는 명예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ㄹ. 징역, 금고, 구류는 모두 자유형에 해당한다.

### 08 형벌 및 보안 처분 이해

**문제 분석** 구류는 자유형, 과료는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며,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보호 관찰이고,

A와 B는 각각 구류나 과료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ㄱ. (가)에 ‘자유형인가?’가 들어가면 A는 과료, B는 구류이다.

ㄴ. (가)에 ‘재산형인가?’가 들어가면 A는 구류, B는 과료이다.

**오답 피하기** ㄷ. A~C 중 명예형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ㄹ.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C는 보안 처분으로 확정이 되므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25~128쪽
1 ④	2 ③	3 ⑤	4 ⑤	
5 ④	6 ③	7 ③	8 ②	

### 1 형법의 의미와 기능 이해

**문제 분석** 자료에서는 형법을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그 사례를 (가), (나)로 보여 주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형법은 (가)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나)도 포함한다.

**정답 찾기** 갑. 실질적 의미의 형법은 법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범죄와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규정한 모든 법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가), (나)는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는 해당한다.

정.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든 형법은 모두 국가 형벌권의 한계를 규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

**오답 피하기** 병.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든 형식적 의미의 형법이든 형법은 모두 법익과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 2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첫 번째 사례는 갑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며, 두 번째 사례는 을의 책임 조각 여부가 쟁점이다. 갑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가 되며, 을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감경 사유만 되므로 유죄가 된다.

**정답 찾기** ③ 갑에 대한 재판의 쟁점은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갑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에 들어갈 말은 ‘긴급 피난’이다.

② 심신 상실 상태와 달리 심신 미약 상태는 책임 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책임 감경 사유만 되므로 을은 유죄이다. 따라서 ㉠에 '무죄'는 들어갈 수 없다.

④ 법원은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법원은 갑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⑤ 법원은 을이 행위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하였다. 심신 미약 상태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책임 감경 사유이다.

### 3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검사가 국가 보안법 규정을 유추 해석하여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정답 찾기** ⑤ 법원은 A의 행위가 이적 표현물의 '소지'와 유사한 것일 뿐 국가 보안법이 명시한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제시된 국가 보안법 조항은 '형법'의 명칭을 갖는 법률의 내용이 아니므로 형식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② 검사는 현행의 성문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추 해석을 한 상황이므로 소급효 금지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③ 검사는 현행 성문 법률 조항을 적용하였으나 유추 해석을 한 상황이므로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

④ 비례성의 원칙은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책임 사이에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원의 판단에서 비례성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 4 죄형 법정주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형식적(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나)는 실질적(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는 말이다.

**정답 찾기** ⑤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내용이 실질적 정의에 합치되도록 적정한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관의 자의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자의로부터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형식적(근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는 말이다.

② (나)는 실질적(현대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를 표현하는 말이다.

③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와 실질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 모두 법관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

④ 부당한 법률에 의한 형벌권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 5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는 갑의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타나 있다.

**정답 찾기** ④ 법원은 갑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에 해당하는 것)' 인지를 판단하였다. 즉,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는데, 결과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갑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을 뿐, 위법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② 갑의 행위는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③ 갑이 법적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갑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은 갑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⑤ 검사는 갑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을 뿐, 책임 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6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구체적 사례에 대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리적 순서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 A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이고, B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며, C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D는 유죄이다.

**정답 찾기** ③ 법원은 갑의 행위가 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한 '강요된 행위'라고 보았다. 이는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갑의 행위가 C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갑의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무고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② 법원은 갑의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만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니다.

④ 지구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제시문에서 법원은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갑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⑤ 갑의 남편이 갑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결하지 않았다.

### 7 형법의 의미 및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두 형법 조항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첫 번째 도로 교통법 조항에서는 형벌이 나타나 있으므로 실질적 의미의 형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두 번째 도로 교통법 조항에서는 과태료만 나타나 있으므로 형벌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나.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도 형벌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도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

다. 징역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벌금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가. 자격 정지와 자격 상실은 명예형, 사형은 생명형, 무기 징역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다.

라. 벌금이나 과료는 재산형에 해당하는 형벌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행정 처분의 일종이다.

### 8 형벌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간단한 코딩 수업을 소재로 활용한 문항이다. 각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옳은 진술에 램프가 나타난 선지를 고르면 된다.

**정답 찾기** (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즉, 자유형과 명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라) 자유형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으며, 금고와 구류는 수용자의 신체에 따라 작업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징역과 구별된다.

**오답 피하기** (나) 형법에는 형벌 중 하나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다. 사형은 생명형이다.

(다) 형벌과 보안 처분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중 처벌로 보지 않는다.

## 13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34~13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③	06 ③	07 ①	08 ④

### 0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은 검사와 피의자의 대화로, 이를 통해 검사의 역할과 기소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 찾기** 나.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라. 재판의 집행(형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가 지휘한다. 단,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관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예를 들어 사형 집행의 정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오답 피하기** 가. 갑은 현재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이다. 검사가 기소한 이후에 피고인이 된다.

다. 법원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하므로 갑이 범죄자라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 0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수업 장면을 통해 형사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수사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체포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기소는 수사 이후에 이루어진다.

**정답 찾기** 병. 수사 기관의 인지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기도 하며, 현행범인의 체포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기도 한다.

정. 구속은 사전에 발부된 영장에 의한 것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체포와 구별된다. 현행범인의 체포나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갑.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을.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며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 된다.

### 03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구체적 사례를 형사 재판의 절차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수사는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공판은 공소 제기 이후 법원에 의하여 진행되는 심리 절차로, 피고인의 형사

책임 유무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일련의 소송 절차이다.

**정답 찾기** ⑤ 유죄 및 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형을 선고하는 것은 판사이지만, 사형 집행 정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형 집행의 지휘 및 감독 주체는 검사이다.

**오답 피하기** ① 기소는 영장의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는 무죄의 취지가 아니며,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③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④ 공판에서 소송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 04 국민 참여 재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그림에 배심원석이 있다는 점을 통해 국민 참여 재판임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다.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는다.

라. 국민 참여 재판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이나 의견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국민 참여 재판은 1심에서만 적용되며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관할한다.

나.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 사건만을 대상으로 한다.

#### 05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문항이다. 소년 사건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찾기** 을. A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으며, 소년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병. A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지만, 관할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갑.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정.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에게 형벌은 부과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부과할 수 있다.

#### 06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호 원칙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적법 절차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정답 찾기** ③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다.

**오답 피하기** ① 피의자는 기소 이후에 피고인이 된다.

②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벌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④ 진술 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⑤ 적법 절차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은 형사 절차 단계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 07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및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면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도 한다. 한편,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자신을 석방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정답 찾기** ① A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 B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지만,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②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구속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구속 적부 심사 제도(A)이다.

③ 피의자 구속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다. 따라서 A가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다.

④ 구속 적부 심사 청구나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모두 기소 전에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되기 전에 거치는 절차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08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이해

**문제 분석**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형사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형사 피해자 등의 인권 보장 제도로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 형사 보상 제도, 배상 명령 제도, 명예 회복 제도 등이 있다.

**정답 찾기** ④ 제시된 사례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나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배상 명령 제도는

상해죄 등 일정한 사건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간단한 신청 절차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오답 피하기** ①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제시된 사례와는 관련이 없다.

② 예를 들어 1심에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2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배상 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③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즉, 손해 배상이 아니라 국가의 구조금을 받는 것이다.

⑤ 배상 명령 제도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민사적 손해 배상을 받게 할 수는 있으나, 국가가 우선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병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은 옳은 진술의 카드, 을은 틀린 진술의 카드를 가져간 상태이므로 을과 달리 갑은 이번 차례에서 옳은 진술의 카드를 추가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

ㄷ. C의 내용인 '모든 형사 사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틀린 진술이고, D의 내용인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에 해당한다.'는 옳은 진술이다. 따라서 갑이 승리하려면 C가 아닌 D를 가져가야 한다.

## 2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례는 검사가 갑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 이후 검사는 갑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갑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정답 찾기** ② 구속 적부 심사 청구는 기소 전에만 가능하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기소 전 상태이므로 갑은 피의자이다.

③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중대한 사실 오인이나 그 오인의 의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 구제 절차이다. 1심 판결 후 검사나 갑은 재심 청구가 아니라 항소를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 종결의 권한도 있다.

⑤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은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받는다.

## 3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구체적 사례를 통해 형사 절차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정답 찾기** ㄱ.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의 적법성이나 필요성을 심사하여 석방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다.

ㄴ. 갑은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을 것이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ㄷ.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에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예 회복 제도를 통해 무죄 재판서를 1년간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누가 2심을 청구했는지 알 수 없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므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한 당사자는 정황상 피고인일 가능성이 크며,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울 경우 검사가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항소했을 수도 있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36~139쪽

- |     |     |     |     |
|-----|-----|-----|-----|
| 1 ④ | 2 ② | 3 ④ | 4 ③ |
| 5 ③ | 6 ② | 7 ④ | 8 ② |

## 1 형사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카드 A의 내용은 옳지만, 카드 B의 내용은 옳지 않다. 확정된 형벌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정답 찾기** ㄴ. 갑은 옳은 진술의 카드 A를 가져간 상태이고, C의 내용인 '형사 재판은 검사의 기소에 의해 시작된다.'라는 진술은 옳은 내용이므로 갑이 C를 가져가면 '빙고!'를 외쳐 승리할 수 있다.

ㄷ.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반드시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거쳐야 한다.'와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판사와 피고인이다.'라는 진술은 모두 틀린 내용이다.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제도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아니라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이다.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옳은 진술의 카드를 2장 모아야 승리할 수 있는데, C와 D가 모두 틀린 진술의 카드이므로 갑과 을은 모두 이번 차례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

#### 4 형사 절차, 국민 참여 재판,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1), (3)은 옳은 진술인데 학생이 각각 ○, ×라고 표시하였으므로 (1)의 진술에 대해서만 1점을 받는다. (2)는 틀린 진술인데 학생이 ○라고 표시하였으므로 0점을 받는다. 따라서 총점이 2점이 되려면 (가)에 틀린 진술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 찾기** ③ 을은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형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었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옳은 내용임으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① 국민 참여 재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틀린 진술임으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미결 구금되었던 적이 없으므로 갑이 형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틀린 진술임으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집행 유예가 아니고 선고 유예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틀린 진술임으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며, 국민 참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선정한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갑은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틀린 진술임으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5 소년 사건의 처리 절차 이해

**문제 분석** 표에 제시된 적용 가능 조치들을 통해 갑, 을, 병의 연령과 가능한 형사 절차 등을 파악해야 한다. 소년 사건의 경우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 및 형벌 등 어떠한 형사 제재도 받지 않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결정,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갑의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이고, 병의 경우 10세 미만이며, 을의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정답 찾기** ㄷ. 병은 심신 상실자도 아닌데 어떠한 형사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이는 병이 10세 미만임을 의미한다.

ㄹ. 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고, 병은 10세 미만이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만 되므로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며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을의 사건과 병의 사건은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ㄱ. 갑은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ㄴ. 을은 형벌의 대상은 아니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은 되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즉, 검사에게 송치되지 않는 연령 대이다.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조치이다.

#### 6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보석 제도는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이므로 A가 보석 제도, B와 C는 각각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중 하나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는 B, C에 해당하고 A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보석 제도는 기소 이후 재판 절차 중에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A는 보석 제도이다.

ㄴ. B와 C는 서로 다른 제도이어야 하므로 C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라면 B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이어야 한다.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당사자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진술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A는 보석 제도이므로 보증금 납입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B와 C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 또는 구속 적부 심사 제도 중 하나로서 보증금 납입이 필요하지 않다.

ㄷ. A는 보석 제도이고, 보석 제도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구속 적부 심사는 피고인이 청구할 수 없고, 기소 전 피의자 신분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가)에 해당 진술은 들어갈 수 없다.

#### 7 형사 보상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갑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을은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 보상 제도는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사법 경찰관으로부터 무죄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국가에 구금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갑과 달리 을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갑은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되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 유예 처분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즉, 기소 유예 처분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 아니므로 갑은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을은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형사 보상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기소 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

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는 것이다.

② 을의 경우 대법원이 □□ 지방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는 것은, 1심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담당하고 2심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구속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갑과 을은 모두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갑과 을 모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⑤ 명예 회복 제도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갑이 아닌 을만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8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제도 이해

**문제 분석** (가)~(라)의 내용 중 옳은 진술을 찾고 거기에 해당하는 영역에만 불이 들어온 전광판을 찾아야 한다. A는 미결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B는 구속 기소되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상고로 인해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C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나)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구속 전에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고,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기소 전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B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를 거쳤으며, 현재 구속 적부 심사는 청구할 수 없다.

(라) B는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형사 보상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반면 A는 미결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C는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거나 받았던 사람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A와 C는 모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가) 검사는 A의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죄가 안 됨’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다. 이는 A의 행위가 재물 손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 명예 회복 제도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인의 무죄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기소되지 않은 A와 아직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B는 명예 회복 제도를 활용할 수 없고, 무죄가 확정된 C만 활용할 수 있다.

## 14 근로자의 권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43~144쪽	
01 ④	02 ③	03 ②	04 ①
05 ②	06 ②	07 ③	08 ④

### 01 노동법의 등장 배경 이해

**문제 분석** 밑줄 친 A법은 노동법이다. 노동법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한다.

**정답 찾기** ④ 고용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확대하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근로 계약을 근로자가 체결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크게 위축되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노동법에서는 고용과 해고에서 사용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그 절차를 엄격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 오답 피하기** ① 노동법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도모한다.  
 ② 노동법은 근로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공정성을 갖도록 한다.  
 ③ 노동법은 근로 시간을 제한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도모한다.  
 ⑤ 노동법은 노사 간 대립에 일정 부분 국가의 개입과 조정을 허용한다.

### 02 헌법의 근로의 권리 규정 이해

**문제 분석** 헌법 제32조에서는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고용 증진, 최저 임금제, 근로 조건의 기준,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근로 조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조건을 말한다. 임금, 근로 시간, 휴일, 퇴직금, 근로의 장소 등이 포함된다.

- 오답 피하기** 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영업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최저 임금제는 근로 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18세 이상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④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4시간 근로의 경우 30분 이상

의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성 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많은 휴게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⑤ 18세 미만의 연소 근로자도 임금 청구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03 근로 3권의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단결권, (나)는 단체 교섭권, (다)는 단체 행동권이다.

**정답 찾기** ㄱ. 근로자는 근로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이므로 우리 헌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즉, 단결권은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보장된다.

ㄴ.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며, 부당 노동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ㄴ.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섭에 응해야 한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ㄷ. 노동조합이 단체 행동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 04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 찾기** ① 부당 노동 행위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이다. 질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해고 예고 의무를 위반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당 해고이다.

③ 해고 대상자를 정하려면 업무 능력 등의 정당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나이순으로 해고한 것은 연령에 따른 차별로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

④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05 부당 노동 행위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행위들을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 3권의 하나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파업 당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행위를 한 직원 갑을 회사가 징계한 것은 근로 3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가 될 수 없다.

③ 공장의 지방 증설 계획은 경영상의 업무로서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다. 노동조합의 철회 요구를 거절한 것은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을 침해한 행위는 아니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임금 협상 요구에 대해 태풍 피해 수습을 이유로 임금 협상을 다음 달로 연기하자고 한 것은 단체 교섭 요구 자체를 거절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⑤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경쟁 업체 관계자에게 핵심 기술 정보를 건넨 행위를 한 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한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 06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A 회사에 근무하던 갑, 을, 병이 모두 최근에 해고되었는데, 해고 사유는 각각 다르다. 표는 갑, 을, 병의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 사례를 분류한 것이다.

**정답 찾기** ㄱ.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갑은 쟁의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어 갑이 속한 A 회사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을과 병의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 회사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은 '예', ㉡과 ㉢은 '아니요'이다.

ㄷ. 지방 노동 위원회는 병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으므로 A 회사가 병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해고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ㄴ. 지방 노동 위원회는 을의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을은 행정 법원에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ㄹ. 갑, 을, 병은 모두 노동 위원회 구제 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7 청소년의 근로 계약서 분석

**문제 분석** 근로자 을은 17세로서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에 해당한다. 연소 근로자와 같은 청소년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로서 근로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거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으므로 근로 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③ 근로 기준법상 연소자는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7시간이고, 사용자와 합의할 경우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 계약서상 을의 소정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이므로, 을이 근무일인 화요일에 근로 계약 내용대로 근무할 경우 84,000원을 받게 되며,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18,000원을 받게 되므로 화요일 임금은 102,000원이다.

**오답 피하기** ①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 계약을 직접 체결해야 한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피용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④ 을의 근무일에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의 토요일 근무는 휴일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상 토요일은 근무일이므로, 을이 근로 계약 내용대로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갑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을이 1월부터 2월까지 근로할 경우 갑은 을에게 임금을 1월과 2월 일정한 날짜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갑은 을에게 근로 계약 기간 종료일인 2월 29일에 근로 계약 기간 동안의 임금 전체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08 부당 해고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은 A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A 회사가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이에 갑이 □□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 행정 법원도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갑이 복직하였으므로 2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찾기** ④ 갑이 제기한 행정 소송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다. 따라서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피고는 A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②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도 노동 위

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갑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 의 근로 3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2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갑이 복직하였으므로 2심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⑤ □□ 행정 법원과 중앙 노동 위원회는 모두 갑에 대한 해고가 부당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45~147쪽
1 ②	2 ③	3 ④	4 ③	
5 ⑤	6 ④			

1 노동법의 이해

**문제 분석** 사회법의 하나인 노동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 기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단체 결성과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두고 있다.

**정답 찾기** 가. 노동법은 고용 관계라는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에 해당하는 법이다.

나.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나. 근로 기준법에서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근로 계약은 사용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부분에 한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

리. 임금 지급 방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등은 개별적인 근로 계약의 내용이므로 근로 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 교섭, 쟁의 행위,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근로 계약의 이해

**문제 분석** 갑은 19세로서 성인 근로자이다. 대형 마트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무하면서 시간당 12,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정답 찾기** ③ 갑은 성인 근로자이므로 1일 법정 근로 시간이 8시

간이다. 따라서 ㉔은 근로 기준법상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부모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② 갑의 토요일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니라 근로 계약상의 근로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일하면 시간당 12,000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날의 임금은 84,000원이다.

④ 근로 기준법의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 조건을 낮출 수 없다. 따라서 A는 계약서에 명시된 갑의 임금을 갑과 합의하더라도 최저 임금 수준 미만으로 변경하여 지불할 수 없다.

⑤ ㉔은 휴게 시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 기준법에 어긋난다.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근로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

### 3 연소 근로자의 근로 계약 이해

**문제 분석** 을과 달리 갑의 법정 근로 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갑은 근로 기준법상 연소 근로자이다. 을은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다.

**정답 찾기** 나. 연소 근로자는 법정 근로 시간이 1일 7시간 이내이며 사용자와 합의하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현재 갑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의 근로를 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과 합의한다면 1일에 1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1일 1시간 연장 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르. 사용자는 연소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가.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직 인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갑은 중학교를 졸업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근로 계약 체결 시 취직 인허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 연소 근로자라도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병은 갑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 갑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4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쟁의 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을에 의해 해고되자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였다. ○○ 지방 노동 위원회가 구제 명령을 내렸지만, 을이 이에 불복하여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고,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승소하였다.

**정답 찾기** 나.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했으므로 을에 의해 자신의 근로 3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다. ○○ 지방 노동 위원회는 갑의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구제 명령을 하였으므로 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갑이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중앙 노동 위원회는 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가. 을의 부당 노동 행위에 의해 갑이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갑이 속한 노동조합도 을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제기하는 민사 소송이므로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르. ◇◇ 행정 법원은 갑에 대한 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으므로 갑에 대한 을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였다.

### 5 부당 노동 행위의 이해

**문제 분석** 사용자가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A는 부당 노동 행위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⑤ (나)에 '2명'이 들어가면, 옳은 답변을 한 사람은 을과 병이고, (가)에는 틀린 답변이 들어가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경우는 근로 3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용자가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근로 3권 침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의 사례가 아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을 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근로 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갑은 틀린 답변을 했고, 을과 병이 맞는 답변을 했으므로 정이 맞는 답변을 하면 옳게 설명한 사람은 3명이 된다.

②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부당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중앙 노동 위원회가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할 경우 근로자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회사 자금을 횡령한 노동조합 간부를 해고한 경우는 근로 3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 노동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을과 병만 옳은 답변을 했으므로 (나)에 ‘2명’이 들어간다.

### 6 부당 해고 구제 절차의 이해

**문제 분석** 자료는 중앙 노동 위원회의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 법원의 판결이다. 법원은 A 회사가 근로자 갑을 해고했는데,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④ 법원은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아닌데도 중앙 노동 위원회가 위법한 재심 판정을 내렸다고 보고 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을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법원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했으므로 갑이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소송의 피고는 중앙 노동 위원회 위원장이다.

② 집행 유예가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해고된 것은 사용자의 근로 3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사유이다. 따라서 법원은 부당 노동 행위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이유로 부당 해고로 판단하였다.

③ 이 사건은 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이다.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인이 될 수 없다.

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을 하여 행정 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V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148~149쪽

01 ④

02 ①

03 ①

04 ⑤

### 01 범죄의 성립 요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된 사건 (가)~(마)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범죄의 성립 요건 세 가지(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를 기준으로 변호인의 주장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순으로 순차적인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④ ‘심신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는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행위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갑의 폭행이 도망가는 현행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가 된 사례이다. 이는 갑의 폭행이 정당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당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즉, 법원은 갑의 폭행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은 없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한 것이다.

② (나)는 을의 폭행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즉, 법원은 을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다. 책임의 조각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③ (다)는 병이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로 선고된 것이다.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조각된다. 즉, 법원은 위법성 여부가 아니라 책임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⑤ (마)는 무의 폭행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받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이다. 자구 행위는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 02 형사 절차에 대한 종합적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과 인권 보장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답 찾기** ① 현행범에 대한 긴급 체포 등은 사전에 발부받은 영장 없이도 가능하지만, 구속은 반드시 판사가 사전에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 실질 심사 제도)는 피의자(갑)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이다.

③ 갑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

EBS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즉, 집행 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다.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공소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선고 유예이다.

④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는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을의 경우 지갑을 절취당하여 재산상의 피해만 발생한 것이므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병은 20세로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며, 자신의 오토바이를 지키는 과정에서 갑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즉, 갑은 책임이 조각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비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03 근로자의 권리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를 통해 갑은 15세 이상 18세 미만, 을은 18세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근무일이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는 정보도 주의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① 근로 계약에서 주휴일 등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② 갑의 근무일이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인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한다.

③ 을은 18세 이상의 근로자이므로 연소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을과 합의한 경우라면 매 근무일 2시간씩 연장하는 것은 근로 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연소 근로자의 경우 1일 1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할 수 없다.

④ 갑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반면 을은 18세 이상이므로 법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⑤ 갑은 연소 근로자이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나, 을은 18세 이상이므로 그렇지 않다.

### 04 형사 절차 및 인권 보호에 대한 이해

**문제 분석** 형사 절차 전반과 인권 보호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이 필요한 문항이다. 갑은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 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병은 금고 2년을 선고받았고, 정은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을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원이 볼 때 을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답 찾기** ⑤ 정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의 선고 유예를 하거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안 처분의

하나인 보호 관찰을 명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갑은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 유예는 실효 없이 유예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실효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집행 유예이다.

② 을은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형사 보상 제도는 구금된 상태에 있었던 피의자나 피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을은 구금된 적이 없으므로 형사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③ 보안 처분의 하나인 치료 감호는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을은 심신 상실자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을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므로 법원은 을에게 치료 감호를 명할 수 없다.

④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은 판사의 지휘가 아니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된다.

# 15 국제 관계와 국제법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54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⑤

## 0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터키)와 그리스 등 자유주의 국가들을 미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련의 영향력 확장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1947년에 발표된 트루먼 독트린이다.

**정답 찾기** ③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국제 사회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 간의 이념에 기반한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오답 피하기** ① 식민지 확보 경쟁으로 강대국 간 대립이 심화된 것은 19세기 후반이다.

② 주권 국가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 사회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이다.

④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와 제3 세계의 부상으로 냉전 체제가 점차 완화된 것은 1970년대이다.

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 02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관계는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관계들의 총체를 말한다. 국제 관계는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여 구성되며, 각국은 원칙적으로 평등한 주권을 가진다. 또한 국제 사회에는 힘의 논리와 국제 규범이 공존한다.

**정답 찾기** ① 이탈리아가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싱가포르가 미군의 해·공군 기지를 자국으로 유치한 것은 자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둔이 미국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컸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국제 사회에서 각국은 인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도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③ 국제 사회는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국가 간 갈등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제

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⑤ 국가 간 문제가 상호 존중의 가치에 따라 해결되기도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 0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감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 힘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정답 찾기** ④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자국의 이익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설득보다 군사적 수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① 냉전 체제의 국제 질서를 설명하기에 용이한 것은 힘의 논리를 강조한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② 국가가 이성적·도덕적 행위를 한다고 보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가가 이기적 욕망을 제어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⑤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현실주의적 관점은 세력 균형 전략을 국제 사회의 분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본다.

## 04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에서 ㉠은 국제 사회에서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인정되어 왔으므로 국제 관습법, ㉡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조약이다.

**정답 찾기** ㉡.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조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

㉢. 국제 관습법과 조약은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55~157쪽

1 ④      2 ①      3 ③      4 ②  
5 ②      6 ⑤

## 1 국제 사회의 변천 과정 이해

**문제 분석** (가)는 1989년 몰타 선언, (나)는 1970년대의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와 제3 세계의 부상, (다)는 1947년 트루먼 독트린, (라)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정답 찾기** ④ 베스트팔렌 조약에 참가한 국가들은 주권 평등, 영토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등의 원칙에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주권과 영토를 가진 국민 국가가 국제 사회의 주체로 등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몰타 선언으로 인해 국제 사회는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국제 연합(UN)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1945년 설립되었으며, 몰타 선언과는 관련이 없다.

② 1970년대 들어 중국과 미국의 수교, 중국과 소련의 분쟁 등으로 공산 진영이 약화되었다. 또한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는 제3 세계의 부상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었다. 이념 대립에 기반한 냉전 체제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트루먼 독트린이다.

③ 트루먼 독트린을 계기로 국제 사회는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이다.

⑤ 시기별로 나열하면 (라)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 (다) 1947년 트루먼 독트린 → (나) 1970년 공산 진영의 결속력 약화와 제3 세계의 부상 → (가) 1989년 몰타 선언 순이다.

## 2 국제 관계의 특징 이해

**문제 분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국제 규범을 무시한 행위이다. 이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하였고, 러시아는 천연가스의 서방 공급 중단을 경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정답 찾기** 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한 것, 러시아가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중단을 경고한 것들은 모두 국제 관계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제 관계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ㄷ. 제시된 사례에서 보편적인 국제 규범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ㄹ. 제시된 사례에 국제 비정부 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나타나 있지 않다.

## 3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규범에 따른 집단 안보 체제를 중시하는 것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과 ㉡에 들어갈 대

답에 따라 A, B는 각각 자유주의적 관점과 현실주의적 관점 중 하나이다.

**정답 찾기** ③ ㉠이 '예'이면, A는 자유주의적 관점,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분쟁 해결 과정에서 국제법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므로 ㉡은 '아니요'가 된다.

**오답 피하기** ① ㉠이 '예'이면 A는 자유주의적 관점, B는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국제 관계를 국가 간 힘의 대립 관계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② ㉡이 '예'이면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국제 사회에 보편적인 선(善)이 존재한다고 전제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므로 해당 질문은 (나)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이 '예'이면,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므로 ㉡은 '아니요'가 된다.

⑤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므로 A는 현실주의적 관점, B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이 '아니요'이면, (가)에 현실주의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은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4 국내법과 국제법의 이해

**문제 분석** ㉠은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하나인 조약, ㉡은 국내법의 하나인 법률이다.

**정답 찾기** ㄱ.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ㄴ. ㉠과 같은 법률은 국내법이므로 고유한 입법 기구인 국회에서 제정되었지만, ㉠과 같은 조약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제정되었다.

**오답 피하기** ㄴ. 조약과 같은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다.

ㄷ. 국내법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집행되지만,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 5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에 따라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재판 규범으로 적용하고 있다.

**정답 찾기** ②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은 국제 관습법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조약의 비준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권의 제약 등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조약의 비준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③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는 특징을 갖는 국제법의 법원(法源)은 조약이다.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그 내용과 성

립 시기가 불분명하다.

- ④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인 국제 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⑤ 국제법 중에서 조약은 체결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 6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에서 원칙적으로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이다. 조약은 국가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도 체결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국제 관습법이다.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조약은 일반적으로 체결 당사자 간에만 적용되지만,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모든 국가에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적용된다.

**정답 찾기** ⑤ 갑의 점수가 가장 낮고, 병의 점수가 가장 높고, 을의 점수가 중간이 되려면 병은 갑의 카드 중 3점 짜리인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 규범으로 적용된다.'는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 현재 을의 카드는 2장 모두 1점짜이므로 갑은 어느 카드를 가져가도 상관없다. 을은 갑보다는 점수가 높아야 하므로 병의 카드 중 2점 짜리인 '국제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갑은 2점, 을은 3점, 병은 4점이 된다. 따라서 갑과 을의 점수 차이는 1점, 을과 병의 점수 차이도 1점으로 같다.

**오답 피하기** ① 원칙적으로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조약 뿐이므로 1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 규범으로 적용되는 것은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모두에 해당하므로 3점이다. 따라서 갑이 배부받은 2장의 카드에서 얻은 점수의 합은 4점이다.

② 병이 배부받은 카드 중에서 국제 사회에서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이다.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보편적 원칙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따라서 병이 배부받은 카드에서 조약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적힌 카드는 없었다.

③ 을이 배부받은 카드 중 하나는 조약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적힌 카드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 관습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적힌 카드이다. 따라서 갑은 을의 카드에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힌 카드를 가져갈 수가 없었다.

④ 갑은 처음 카드를 배부받았을 때는 4점이었으나 을의 카드 중 어느 것을 가져가도 2점이 된다. 따라서 갑의 점수는 처음 카드를 배부받았을 때보다 2점이 낮다.

## 16 국제 문제와 국제기구

수능 기본 문제

본문 161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①

### 01 국제 문제의 해결 방법 이해

**문제 분석**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오랜 민족 갈등은 국제 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이다. 당사국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지자 유럽 연합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가 나서서 중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정답 찾기** ③ 세르비아와 코소보 간의 오랜 민족 갈등으로 무력 충돌 우려까지 빚어지자 유럽 연합이 나서서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두 나라가 이 중재안을 수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를 통해 국제 문제의 해결에서 유럽 연합과 같은 정부 간 국제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문제의 해결에서 당사국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시된 사례는 당사국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국제기구가 개입하여 해결한 경우를 나타낸다.

② 국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기 어렵다.

④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서 찾기 어렵다.

⑤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국들이 국제 사법 기구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지만 제시문에서는 찾기 어렵다.

### 02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 A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주요 사법 기관이다.

**정답 찾기**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강제적 관할권이 없어 분쟁 당사국 모두 동의한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는 문서의 형식으로 된 조약뿐만 아니라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구두 합의 형태의 조약,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 원칙 등을 재판에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다.

②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는 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직접 제재할 수는 없다.

④ 국제 연합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연합 비회원국이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재판할 수 있다.

⑤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만 포함된다.

다. 국제기구와 개인은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0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45년에 창설되었다. 국제 연합은 6개 주요 기관과 각종 전문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기관에는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사무국, 신탁 통치 이사회 그리고 국제 사법 재판소가 있다.

**정답 찾기** ④ 총회는 국제 연합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서 주권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1국 1표를 행사한다. 또한 총회의 의결은 일반적으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연합은 전쟁 방지와 국제 평화 실현 및 국가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제 연합은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②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실질 사항이 아닌 절차 사항을 의결할 때는 상임 이사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안전에 대해 상임 이사국이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일방의 제소에 상대국이 응하여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가 간 분쟁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만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총회에서 매년 5개국씩 선출된다. 실질 사항에 대해 거부권은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가진다.

### 04 공공 외교의 이해

**문제 분석** A는 공공 외교이다.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컫는 전통적 의미의 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 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기제를 활용하여 외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 찾기** ㄱ. 공공 외교는 국민 개개인, 시민 단체, 기업, 지방자치 단체, 각급 정부 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대 국가의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외국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야 성공할 수 있다.

ㄴ. 공공 외교는 다른 나라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형 자산인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이다.

**오답 피하기** ㄷ.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상대국 문화보다 우수함을 적극 홍보하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로서 상대국 대중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

ㄹ. 공공 외교는 외교의 주체가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로 넓혀져야 하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성공할 수 있다.

## 수능 실전 문제

본문 162~163쪽

1 ④

2 ②

3 ②

4 ⑤

### 1 국제 문제의 종류 이해

**문제 분석** 국제 문제 중 (가)는 환경 문제, (나)는 빈곤 문제이다.

**정답 찾기** ④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은 물론 교육이나 의료, 문화생활 등에 있어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 문제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로 확산된다.

**오답 피하기** ① 환경 문제는 각국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지구상의 공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나타났다.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이념 대립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환경 문제는 어느 한 국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다른 나라로 파급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당사국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③ 빈곤 문제는 자연 재해, 자원 부족, 내전, 국가의 정책 실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환경 문제나 빈곤 문제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성격에 맞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 외교적으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국제 사법 재판소와 같은 국제 사법 기관에 제소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 해결 방법도 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이다. 표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ㄱ. A가 총회라면 ㉠은 '예'이고, ㉡, ㉢은 '아니요'가 된다. 또한 표결 방식에서 강대국의 힘의 원리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이므로 ㉣도 '아니요'가 된다. 따라서 ㉡, ㉢에 들어갈 답변은 모두 '아니요'로 같다.

ㄷ. ㉡, ㉢에 들어갈 답변이 '아니요'이므로, ㉣에 들어갈 답변도 '아니요'로 같다. 따라서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없다.

**오답 피하기** ㄴ. ㉠과 ㉣에 들어갈 답변이 모두 '예'라면,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ㄹ. 침략 발생 시 해당 국가에 대해 군사적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안전 보장 이사회뿐이다. (가)에는 2개의 기관에서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주어진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A는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총회, B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총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한 □□국에 대한 규탄 결의는 통과되었고,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인종 학살을 자행한 ○○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결의는 갑국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답 찾기** ②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국 중에서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가결된다. 그러나 절차 사항이 아닌 실질 사항은 상임 이사국 5개국 모두의 찬성을 포함하여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상임 이사국 중 1개국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여 반대하면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 인종 학살을 자행한 ○○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 결의는 갑국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갑국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이며, 해당 안건은 실질 사항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총회가 의결한 안건은 해당 국가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③ 갑국만의 반대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갑국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 이사국임을 알 수 있다.

④ 안전 보장 이사회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 이사국은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로 고정되어 있다. 비상임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며 매년 총회에서 5개국을 선출한다.

⑤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의 표결 방식은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다. 다만,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실질 사항의 의결에서는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이 인정되므로 주권 평등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

### 4 우리나라 외교 정책의 변천 이해

**문제 분석**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가)는 1950년대의 자유주의 국가 중심의 안보 외교, (나)는 1970년대의 공산권 외교 시작, (다)는 1980년대 후반의 북방 외교 정책, (라)는 2000년대 이후 실리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다.

**정답 찾기** ㄷ. 1980년대 후반 국제 정세가 급변하자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북방 외교 정책을 펼쳐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였다.

ㄹ.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사회에서 내란, 난민, 빈곤 문제 등 국제 문제가 부각되자 우리나라는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문

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오답 피하기** ㄱ.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 중심 외교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행해진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다. 몰타 선언은 1989년 미소 정상 회담에 의해 냉전을 종식하자는 선언이고, 6·23 선언은 1973년 우리나라가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 방향을 밝힌 외교 정책 선언이다. 두 선언 모두 공산 진영을 배제하는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

ㄴ. 1970년대 냉전이 완화되고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이념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전략을 펼치자, 우리나라는 6·23 선언을 통해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 VI 단원 기출 플러스

본문 164~165쪽

01 ②

02 ④

03 ①

04 ②

## 0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해

**문제 분석**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의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 을의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정답 찾기** ② 자유주의적 관점은 세계 평화의 실현 방안으로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① 국가 간 권력 관계보다 상호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③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④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다.

⑤ 국제 사회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적 협력보다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 02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안전 보장 이사회, C는 국제 사법 재판소이다.

**정답 찾기** ④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권을 갖는다.

**오답 피하기** ①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상임 이사국과 달리 2년의 임기를 지낸다.

② 총회에서는 주권 평등 원칙에 따른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③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⑤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된다.

##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이해

**문제 분석** 국제법의 법원(法源) 중 A는 국제 관습법, B는 조약이다.

**정답 찾기** ① 우리나라에서 국제 관습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해당한다.

**오답 피하기** ② 개인은 국가, 국제기구와 달리 조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다.

③ 국제기구는 국가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

④ 국제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⑤ 조약은 국제 관습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비준이 있어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04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해

**문제 분석**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중 A는 총회, B는 국제 사법 재판소, C는 안전 보장 이사회이다.

**정답 찾기** ②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된 사건의 당사자에는 국가와 달리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C의 상임 이사국은 대륙별 안배를 통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

④ 총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모두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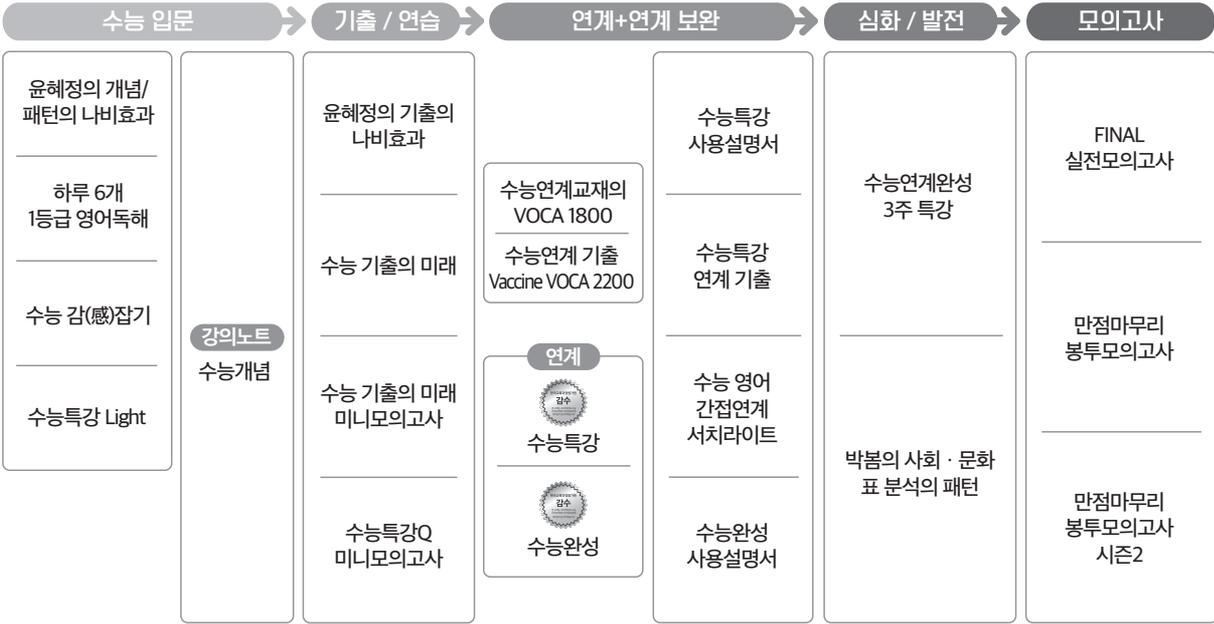
⑤ 조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 고1~2 내신 중점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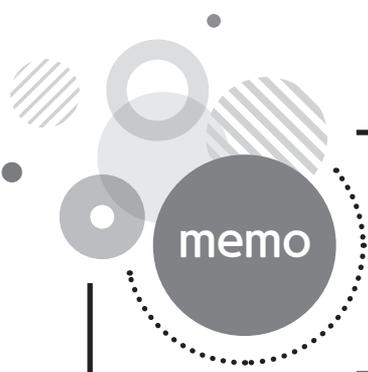
과목	고교 입문	기초	기본	특화	단기
국어	고등 예비 과정	윤해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워크북	<b>기본서</b> 올림포스	<b>국어 특화</b> 국어 독해의 원리   국어 문법의 원리	단기 특강
영어		어휘가 독해다!	올림포스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문제집	<b>영어 특화</b> Grammar POWER   Reading POWER Listening POWER   Voca POWER	
수학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주혜연의 해석공식 논리 구조편	<b>유형서</b> 올림포스 유형편	<b>고급</b> 올림포스 고난도	
한국사 사회		<b>기초</b> 50일 수학	<b>수학 특화</b> 수학의 왕도	고등학생을 위한 다담은 한국사 연표	
과학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b>기본서</b> 개념완성 개념완성 문항편		
		<b>인공지능</b>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 수학과 함께하는 AI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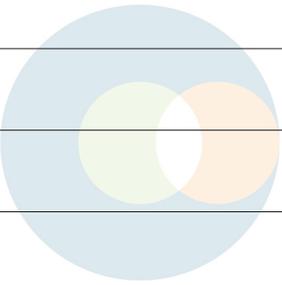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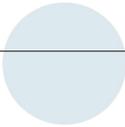
과목	시리즈명	특징	수준	권장 학년
전과목	고등예비과정	예비 고등학생을 위한 과목별 단기 완성	●	예비 고1
국/수/영	내 등급은?	고1 첫 학력평가+반 배치고사 대비 모의고사	●	예비 고1
	올림포스	내신과 수능 대비 EBS 대표 국어·수학·영어 기본서	●	고1~2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집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 개념 기본서	●	고1~2
	단기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유형별 문항 연습	●	고1~2
한/사/과	개념완성 & 개념완성 문항편	개념 한 권+문항 한 권으로 끝내는 한국사·탐구 기본서	●	고1~2
국어	윤해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워크북	윤해정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는 국어 공부의 첫걸음	●	예비 고1~고2
	어휘가 독해다!	학평·모평·수능 출제 필수 어휘 학습	●	예비 고1~고2
	국어 독해의 원리	내신과 수능 대비 문학·독서(비문학) 특화서	●	고1~2
	국어 문법의 원리	필수 개념과 필수 문항의 언어(문법) 특화서	●	고1~2
영어	정승익의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정승익 선생님과 CODE로 이해하는 영어 구문	●	예비 고1~고2
	주혜연의 해석공식 논리 구조편	주혜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유형별 지문 독해	●	예비 고1~고2
	Grammar POWER	구문 분석 트리로 이해하는 영어 문법 특화서	●	고1~2
	Reading POWER	수준과 학습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영어 독해 특화서	●	고1~2
	Listening POWER	수준별 수능형 영어듣기 모의고사	●	고1~2
	Voca POWER	영어 교육과정 필수 어휘와 어원별 어휘 학습	●	고1~2
수학	50일 수학	50일 만에 완성하는 중학~고교 수학의 맥	●	예비 고1~고2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스타강사 강의, 손글씨 풀이와 함께 고1 수학 개념 정복	●	예비 고1~고1
	올림포스 유형편	유형별 반복 학습을 통해 실력 잡는 수학 유형서	●	고1~2
	올림포스 고난도	1등급을 위한 고난도 유형 집중 연습	●	고1~2
	수학의 왕도	직관적 개념 설명과 세분화된 문항 수록 수학 특화서	●	고1~2
한국사	고등학생을 위한 다담은 한국사 연표	연표로 흐름을 잡는 한국사 학습	●	예비 고1~고2
기타	수학과 함께하는 고교 AI 입문/AI 기초	파이선 프로그래밍, AI 알고리즘에 필요한 수학 개념 학습	●	예비 고1~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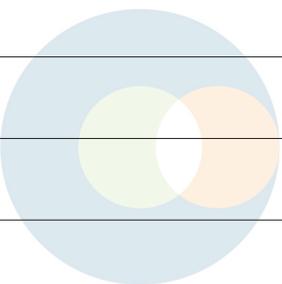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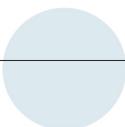
# 고2~N수 수능 집중 로드맵



구분	시리즈명	특징	수준	영역
수능 입문	윤해정의 개념/패턴의 나비효과	윤해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수능 국어 개념/패턴 학습	●	국어
	하루 6개 1등급 영어독해	매일 꾸준한 기출문제 학습으로 완성하는 1등급 영어 독해	●	영어
	수능 감(感)잡기	동일 소재·유형의 내신과 수능 문항 비교로 수능 입문	●	국/수/영
	수능특강 Light	수능 연계교재 학습 전 연계교재 입문서	●	영어
기출/연습	수능개념	EBS 대표 강사들과 함께하는 수능 개념 다지기	●	전 영역
	윤해정의 기출의 나비효과	윤해정 선생님과 함께하는 까다로운 국어 기출 완전 정복	●	국어
	수능 기출의 미래	올해 수능에 딱 필요한 문제만 선별한 기출문제집	●	전 영역
	수능 기출의 미래 미니모의고사	부담없는 실전 훈련, 고품질 기출 미니모의고사	●	국/수/영
연계 + 연계 보완	수능특강Q 미니모의고사	매일 15분으로 연습하는 고품격 미니모의고사	●	전 영역
	수능특강	최신 수능 경향과 기출 유형을 분석한 종합 개념서	●	전 영역
	수능특강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의 지문·자료·문항 분석	●	국/영
	수능특강 연계 기출	수능특강 수록 작품·지문과 연결된 기출문제 학습	●	국어
	수능완성	유형 분석과 실전모의고사로 단련하는 문항 연습	●	전 영역
	수능완성 사용설명서	수능 연계교재 수능완성의 국어·영어 지문 분석	●	국/영
	수능 영어 간접연계 서치라이트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핵심만 모아 구성된 간접연계 대비 교재	●	영어
	수능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필수 중요 어휘 1800개 수록	●	영어
심화/발전	수능연계 기출 Vaccine VOCA 2200	수능-EBS 연계 및 평가원 최다 빈출 어휘 선별 수록	●	영어
	수능연계완성 3주 특강	단기간에 끝내는 수능 1등급 변별 문항 대비서	●	국/수/영
	박봄의 사회·문화 표 분석의 패턴	박봄 선생님과 사회·문화 표 분석 문항의 패턴 연습	●	사회탐구
모의고사	FINAL 실전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중 최다 분량, 최다 과목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실제 시험지 형태와 OMR 카드로 실전 훈련 모의고사	●	전 영역
	만점마무리 봉투모의고사 시즌2	수능 완벽대비 최종 봉투모의고사	●	국/수/영



EBS *i*  

EBS *i*  

EBS *i* 